

**최근 천안함 사건으로 본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 연구**

**최근 천안함 사건으로 본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선임연구관 송 경 호

목 차

I .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II . 북한의 군사전략과 주변국가의 안보정책	9
1. 북한의 군사전략	9
가. 총력전전략	10
나.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략	11
다. 기습전략	11
라. 속전속결전략	12
2. 최근 군사동향	13
3. 주변국가의 안보정책	17
가. 미국의 안보정책	17
나. 중국의 안보정책	20
다. 러시아의 안보정책	23
라. 일본의 안보정책	25
III .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	29
1. 대남공작기구	29
가. 통일전선부	30
나. 225국(구 대외연락부)	31

다. 경찰총국	31
2. 주요 대남도발 사례분석	36
가. 청와대기습 미수사건	37
나.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44
다. 휴전선 땅굴 구축사건	49
라. 관문점 도끼만행사건	55
마.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59
마. 서해교전	62
바. 천안함 폭침사건	71
IV. 결론	78
1. 향후전망	78
2. 대응방안	80
참고문헌	83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북한이 아무런 전쟁 예고나 선언이 없이 1950년 6월 25일 38선을 넘어 대한민국에 대한 전면적 기습공격을 감행하고¹⁾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체결한지도 어느덧 60년이란 세월이 지나갔다.

그동안 한반도는 200여건이 넘는 국지전과 군사적 무력도발이 발생하였고 북한의 호전성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²⁾

특히 동서냉전이 종식된 이후 국제질서가 새로운 화해와 평화, 공존과 공영의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예측하여 왔지만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으며 지역분쟁이 끊임없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는 동북아지역의 화약고로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기가 조성되어 있다.³⁾

북한은 지난 10년간 정부의 지속적인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차에 걸쳐 서해상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여 왔으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듬해부터는⁴⁾ 서해 NLL 부근에서 군사적 위협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

1) D. Paige, *The Korean Decision*(New York : The Free Press, 1968), p. 81; John W. Spanier, *The Truman-Marcthur Controversy and The Korean War*(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59), p. 15.

2) 북한이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의 가동을 중단한 1994년까지 정전협정 위반은 무려 42만 5,000여건에 달한다. 한국일보, 2010. 6. 25.

3) 북한은 체제를 개방할 경우 정치적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한과의 평화공존을 거부하고 있으며, 오히려 핵무기 개발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을 급속히 증대시켜 왔다. 남북문제연구소, 북한의 대남전략 해부, 남북문제연구소, 1996. 253면.

왔다.⁵⁾

2월(5~8일)에는 서해 해상사격구역을 선포하였고 3월 26일에는 천안함폭침사건을 자행하여 46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천안함폭침사건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북한은 5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무모한 대응에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역적 패당이 천안호의 침몰을 우리와 연계되어 있다고 선포한 것인 만큼 그에 대한 물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현지에 파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5월 29일에는 국방위원회 기자회견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리명박 역적패당의 악랄한 반공화국 대결소동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릴 것이다”, “천안호 침몰사건은 철두철미 괴뢰도당이 꾸며낸 날조극, 모략극이며, 조선 서해에서나 비무장지대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경우 그것은 전면전쟁으로 번져 질 수 있다”⁶⁾고 위협하였다.

반제민전도 대변인 성명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는 외세와의 공모결탁 하에 보수집권세력이 돌격대가 되어 연출해 낸 한미합작 모략극⁷⁾이라고 비방선동 하였다.

북한의 대남도발은⁸⁾ 지난 60년 동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4) 북한의 서해해상 침범은 2008년에는 18척으로 2007년 21척과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2009년에는 47척(경비정 22척, 어선 25척)으로 급증하였다.

5) 2010년 1월 24일에는 인민군 총참모부 명의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론’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월 27~28일에는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 NLL 북한 해역에 130mm 평사포,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등 100여발의 포탄을 발사하였다. 당시 국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백령도 해병대 소속 발진포 100발(사거리 3~4Km)의 경고사격으로 대응한 바 있다. 백령도 인근 서해북방한계선(NLL) 해상으로 일제 타격식 포사격에 대해 북한은 김정은이 포병전문가로서 직접 지휘했다고 내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봉, “북한 3대 후계세습 체제 구축 동향과 전망”, 자유민주연구, 2010. 8, 자유민주연구학회, 24면.

6) 로동신문, 2010. 5. 29.

7) 반제민전 대변인 성명. 2010. 5. 22.

왔다.

1960년대에는 남북연방제통일방안 · 통일문제 협상 · 평화문제 조성을 위한 유관국 회의소집 등을 제의하고 청와대기습 · 울진 삼척지구 무장 공비침투 ·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등 무력극지도발을 감행하였다.

1970년대에는 7.4남북공동성명 발표 및 남북적십자 및 조절위회담을 개최하고 평화통일 8개방안 · 대미평화협정 · 정치협상 · 남북 군사당국 자회의를 제의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남침용 땅굴을 구축하고 KAL 기 납치 · 미 헬기 격추 · 판문점도끼만행사건 · 대통령저격미수사건 등 대남도발을 자행하였다.

1980년대에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고 남북미 3자회담 · 남북 국회회담 · 남북 총리회담 · 남북 고위급 정치 · 군사회담을 제의하고 버마 아웅산 묘소 암살폭발 · 대한항공 858기 공중폭파 · 다대포 간첩침투사건 등 무장간첩 침투 및 테러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1990년대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을 진행하면서 경수로 및 핵협상 · 북미 미사일회담 등을 제의하고 정전체제를 무효화시키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고, 강릉 잠수함침투 · 김낙중 간첩 침투 · 부여 무장공비 침투 · 서해교전사건 등 전쟁위협 및 다양한 대남침투를 감행하였다.

2000년대에는 2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도 북미평화협정 체결 · 정치협상회의 등을 제의하고 연평해전과 천안함폭침사건 등을 자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김정일은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직후에도 “나의 통일관은 무력통일이며 당이 평화통일의 구호를 높이 들수록 인민군은 계급의 총창을 날카롭게 베풀어야 한다”⁹⁾고 북한군에게 무력통일준비를 지시한 바 있다.

8) 국군정보사령부, 북한편람, 국군정보사령부, 2000. 78면.

현 시기 남북한이 정치·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를 억제하고 제압하여 통일을 완수해 나가야 할 국가적 안보과제를 안고 있다.

지금까지 한·미 연합방위체제 하에서 대한민국은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효과적으로 대북억제력을 추구하여 왔다.¹⁰⁾

그렇지만 북한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전쟁도발위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각종 도발에 직면할 때마다 위기사태에서 벗어나는 데만 급급하여 위기사태 확대를 방지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인 조치만을 강구하여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고 위기관리체제의 근본적인 정비 및 대응책을 모색하는데 다소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천안함폭침사건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우리의 안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① 군의 무사 안일한 태도로 인하여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응한 초기 대응조치가 적절하지 못하였다.

② 천안함폭침사건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임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를 비롯한 보수·진보진영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총체적 난국임을 보여주었다.

③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한 가운데 우리 내부의 일부 중북 좌파 세력들은 북한의 노선을 추종하면서 안보위협을 부추기는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¹¹⁾

9) 우종창, “6.15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정일의 무력통일 준비지시”, 월간조선 2002년 3월호, 2002. 64면.

10) 황정오, 한·미 군사동맹관계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2001. 16면.

11) 유동열, “한국좌파운동 현황분석”, 자유민주연구 2010. 8, 자유민주연구학회, 2010. 8. 57~58면.

특히 김정일 정권의 대남의식은 60년 전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북한이 적화통일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김정일의 유일적 지배 체제가 존속하는 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장사정포, 특수부대 및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에 의한 선제공격과 속도전, 침투·국지적 도발은 계속될 것¹²⁾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휴전협정 체결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주요대남도발 사례를 분석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 선행연구 검토

북한의 대남도발에 관한 사례연구는 대남전략 및 통일전선, 군사전략 연구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휴전협정 체결 이후 현재까지 무수히 많은 대남무력도발이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데서도 입증할 수 있다.

북한의 대남도발에 관한 사례연구는 군 기관을 비롯하여 북한관련 전문연구기관 및 개별적 연구자들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극동문제연구소에서는 이념교육전서 상을 통해 북한의 침략성과 대남도발의 실체를 청와대 기습미수사건으로부터 1986년 금강산댐 건설까지 단계별로 나누어 주요 대남도발 사례를 분석하였다.

12) 송중환, “공산권자료로 본 6.25전쟁의 재평가”, 자유민주연구 2010. 8, 자유민주연구학회, 2010. 147면.

북한의 무력도발이 북한 내부의 실정과 한국의 정치·사회적 상황, 주변정세 및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는 다소간의 기복을 보여 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때에는 무력도발을 급격하게 강화시키는 반면에 어떤 때에는 간접침략과 위장평화공세를 위한 대외선전에 보다 주력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고 기술하였다.

특히 국제적으로 북한만이 평화 지향적이며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양 가장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우리에게 대한 직접·간접의 도발을 강화하여 우리의 강경한 대응조치를 오히려 호전적인 것으로 역전전해 왔으며, 북한이 침투시킨 무장게릴라의 각종 도발을 한국내의 민주애국시민의 쫓겨간다고 강변하는 등 역공세를 취하여 왔다고 밝혔다.¹³⁾

국방부에서 발행한 국방사 1~4집에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특히 제4집에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남북대화기, 화전양면전술 배합기, 적화혁명 도발기반 조성기로 나누어 정밀분석 하였다. 더구나 1968년 1. 21 청와대 습격사건과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미온적인 태도와 주한미군 1개 사단 철수 결정이 국가 안보상 위기의식¹⁴⁾을 고조시켰다고 밝혔다.

강대섭은 “한미 연합방위체제하 군사적 위기관리 문제점”에서 작전통제권과 북한의 대남도발을 중심으로 연구 하였다. 그는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위기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① 남북한 군사력의 현격한 차이, ②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응징 의지, ③ 대응체계 및 실천수단 부족, ④ 응징 후 나타날 수 있는 전면전 확산, ⑤ 한미연합방위체제 하에서 유엔군사령관 겸 연합사령관이 작

13) 극동문제연구소, 이념교육지도전서 상, 극동문제연구소, 1988. 731면.

1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 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713면.

전통제권 보유, ⑥ 각종 문제의 발생시 미국은 자국의 국가이익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향후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조운형은 “북한의 군사정책 및 군사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에서 군사정책의 변천과정을 군사정책 형성기, 자주노선 추진기, 자주노선 강화기, 군사강국 건설기로 구분하고 시기별 군사정책과 북한의 무력도발 만행 등 주요 사항을 중점 분석하고, 북한의 군사전략에 대응한 한국의 대응방안으로 공세적 방위전략, 첨단정보과학군, 기습공격능력 배양, 한미군사공조체제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정철기는 “한반도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논쟁에 관한 고찰”에서 북한의 주요 대남도발을 군사정전위원회 활동과 연계하여 분석평가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킬 방안을 모색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는 북한의 대남도발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서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남도발사건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이 선행되지 못하였고,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북한의 대남도발을 사전 예측하여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게 하였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이 북한의 주요 대남도발 사례를 분석 검토하고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있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 이후 현재까지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 중심적 내용분석 Textual Content Analysis』 방식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하였으며, 주요자료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통일부 등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자료와 간행물, 북한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참고서적 및 학술지, 논문 및 세미나 발표 자료, 각종 단행본과 신문 및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총 4개의 체계로 구성하였다.

- I.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 검토,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하였다.
- II. 북한의 군사전략과 주변국가의 안보정책에서는 북한의 군사전략과 최근 군사동향, 주변국가의 안보정책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 III.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에서는 대남공작기구, 주요 대남도발 사례분석으로 구분하여 정밀분석 하였다. 우선 개편된 대남공작기구를 요약기술하고 특수전부대의 현황을 파악 한 후 대남도발 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심도 있게 분석 평가하였다.
- IV. 결론에서는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으로 나누어 북한의 대남도발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책을 강구하였다.

II. 북한의 군사전략과 주변국가의 안보정책

1. 북한의 군사전략

북한의 군사전략은 혁명 전략의 수행을 위해 3대혁명역량을 결집한 후 결정적 시기에 혁명의 대사업을 전개한다는 혁명 전략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¹⁵⁾

김일성의 전쟁관과 북한 군사정책의 기본노선인 4대 군사노선에 기초하여 군사전략이 수립되었다.¹⁶⁾

1962년 12월 개최된 당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는 ‘국방에서의 자위의 원칙’으로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의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였다.¹⁷⁾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군사전략의 목표는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있다. 따라서 대남정책이 변화하지 않는 한 북한의 군사정책과 군사전략도 변화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전략구상과 전략개념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15)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 1973 총람편, 국방대학원, 1973. 315면.

16) 한국국방연구원, 2004~2005 동북아 군사력, 한국국방연구원, 2005. 164면.

17) 전군의 간부화는 북한군을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단련시켜 유사시에 모두가 한 계급 이상의 높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말하며, 전군의 현대화는 북한군을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로 무장시키고 현대적 군사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인민의 무장화는 인민군대는 물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모든 주민을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무장시키는 것을 말하며, 전국의 요새화는 주요 군사 및 산업시설을 지하화 하고 북한전역에 방위시설을 구축하여 철벽의 군사요새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 북한연구소, 1999. 1097면.

전자는 북한군이 종국적으로 달성해야 할 전략적 목표를 말하며, 후자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행동과 방법을 의미한다.

북한은 ① 적의 유생역량 소멸, ② 남한전지역의 동시전장화, ③ 수도권 조기 석권 및 전쟁의 유리한 국면 조성, ④ 미군의 지원부대가 도착하기 전 남한전역의 점령을 통해 미군의 주력부대에 대한 사전개입을 차단하고자 하려는 전략을 구상하여 왔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군사전략으로 총력전전략,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략, 기습전략, 속전속결전략¹⁸⁾을 추진하고 있다.

가. 총력전전략

총력전전략은 현대전이 입체전이며 전면전, 정보전, 경제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군사전략도 이에 맞는 총체적 전략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전략을 의미한다.

전쟁에서 순수 군사적인 관점을 배격하면서 정치 우선주의를 견지하고 군사와 경제의 결합, 외교전·심리전·선전전 등으로 군사를 보호할 것과 군사와 심리전, 선전전을 결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북한은 총력전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사상의 전파와 각종흑색선전, 평화공세로 대남심리전과 선전전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는 한편 한국의 전쟁의지를 약화시키고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조성하여 정치체제의 파괴에 의한 군사 지휘체계의 무력화 및 신속한 전쟁 동원체제의 파괴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18) 송경호, "북한의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공안연구 통권 43집, 공안문제연구소, 1996. 119~121면.

나.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략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략은 집중과 분산, 적극적 방어와 후방교란, 대부대와 소부대의 결합,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 즉시적 반격과 연속적 타격, 적 배후에서의 제2전선 형성, 저격수 및 유격조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¹⁹⁾을 말한다.

모택동의 유격전략과 소련의 군사전략을 결합하여 한반도의 실정에 맞게 접목시킨 전략으로 북한은 이를 주체적 전략이라고 밝혀왔다.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략은 산과 하천이 많은 한반도의 지형과 조건에서 전쟁수행의 적합한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기습전략

기습전략이란 적군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선택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전투방식을 말한다. 다시 말하여 시간과 공간에서 시간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신속 정확하게 적의 군사 요충지를 파괴 또는 섬멸하여 짧은 시간과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질·량의 성과를 얻기 위한 전략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불 때 기습공격은 방어에 비해 유리한 측면을 갖고 있다. 그것은 적은 병력으로도 공세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러나 선제기습으로 상대방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지 못할 경우 강력한 보복도 예상해야 할 것이다.

기습전략은 북한 군사전략의 기본을 이루고 있으며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대·소규모의 전략적 기습에 이루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전개

19) 극동문제연구소, 이념교육 지도전서(하), 극동문제연구소, 1987. 1502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북한군은 특수전부대 및 장사정포, 기갑, 기계화부대를 전방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였고 공격 및 기동장비가 최전방 지역에 근접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습전략은 앞으로도 북한군의 기본적 군사전략으로 지속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라. 속전속결전략

속전속결전략은 우세한 병력을 집중운영 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짧은 시간 내에 전쟁의 승리를 이끌겠다는 기동력을 필요로 하는 전략을 말한다.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속전속결전략은 전통적인 군사전략 이론에서 강조되어 왔으며 현대전의 수행방법에서도 속전속결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속전속결전략을 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획득한 전과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의 특유한 정치, 군사배합전략의 기본무기로 활용하기 위해 일단 유리한 상황을 조성한 후 정치협상을 제의 하는 수단으로의 이용을 활용하고 있다.²⁰⁾

속전속결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미국의 증원부대가 한반도에 상륙하기 이전에 전쟁을 종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② 전쟁이 장기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북한의 군수품 보급 및 전쟁수행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③ 국제적인 비난과 함께 유엔의 군사적 제재에 봉착할 수 있다는 예

20) 극동문제연구소, 앞의 책, 1503~1504면.

상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군사전략은 이론적으로는 한반도 지형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은 사상교육과 지형만이 고려되는 것이 아니며, 종합적인 전장 환경, 병력의 교육수준, 무기의 질, 불확실성, 예측 불가의 마찰, 우발사태 등 각종 변수가 작용하게 된다. 때문에 북한의 전쟁지속 역량으로 볼 때 북한이 공격력에서 오판 또는 자의로 전쟁을 도발할 수는 있겠으나, 생존력에서 결코 북한의 뜻대로 전쟁을 종결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²¹⁾고 판단된다.

2. 최근 군사동향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핵무기를 비롯하여 전략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실전배치 하는 등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다.

대내적으로는 군의 정치·사상적 결집을 도모하면서 군 수뇌부의 인사를 단행하였다. 또한 일부 부대의 조직을 개편하고 이들 부대를 전방 지역에 전진배치 함으로써 공세적 전력을 강화시켰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쿠바 등 우방 국가들과의 군사교류·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방국가로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대남적으로는 대남 강경정책을 추구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가증시키는 한편 천안함폭침사건을 자행하고 군의 전면대결 태세를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군사동향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8,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 110면.

첫째, 군 지휘부의 인사를 단행하고 일부 부대의 조직 개편을 통해 군의 지휘능력과 부대의 전투력을 한층 강화시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10년 9월 28일 당 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을 대장으로,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3대 권력 세습체계를 공식화하였다.

또한 군 총참모장 리영호 대장을 차수로,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김정은을 군사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북한 군부의 명실상부한 권좌에 올랐다.

특히 김정일의 누이동생 김경희와 매제인 장성택을 대장으로 임명하여 김정은의 후계인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에는 인민무력부장에 김영춘 차수를, 총참모장에는 리영호 대장을, 4 군단장에는 김격식 대장을 임명하는 등 군 지휘부 및 군단장급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기갑·기계화·포병 부대를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과 현대전의 작전수행에 적합한 사단, 여단으로 개편하여 이들 부대를 중·서부 전선과 평양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6개 군단 및 군단급 부대(기갑·기계화·포병군단)를 2개의 기갑 군단 및 사단, 여단으로 개편하였다.²²⁾

전방군단의 경보병여단을 경보병 사단으로, 사단 경보병 대대를 경보병 연대로 증편하여 특수전 부대의 병력은 12만 여명에서 18만여 명으로 증가되었다.²³⁾

22) 4개의 기계화군단은 2개의 기계화군단 및 4개의 기계화 사단 및 여단으로, 전차군단은 전차 사단 및 수개의 여단으로, 포병군단은 포병사단 및 수개의 여단으로 개편되었다.

23) 이들 부대는 경보교도지도국 예하 17개여단(7개 경보병여단, 5개 항공육전여단, 2개 해상저격여단, 2개 공격저격여단, 1개 저격여단)과 인민무력부 경찰총국 예하 4개 저격여단 및 5개의 경찰 대대, 전방군단 예하 각 경보병사단과 경보병여단, 저격여단, 경찰대대를, 전방사단에는 경보병연대(후방사단은 경보병 대대)를 편성하여 배치하였다.

둘째,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면서 전략무기의 개발 및 실전 배치에 박차를 가하여 왔다.

2009년 1월 현재 북한군의 총병력은 상비전력 119만여 명과 예비전력 770만여 명을 포함하여 889만여 명²⁴⁾으로 군사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비대칭 및 전략무기 개발과 실전 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상군은 102만여 명으로 15개 군단 또는 군단 급 부대²⁵⁾, 155개의 사단(86개) 및 여단(69개)으로 편성되었다.

주요전투장비는 전차 3,900여 대, 장갑차 2,100여 대, 야포 8,500여 문, 다련장/방사포 5,100여 문, 지대지유도무기 발사대 100여 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공군은 11만여 명으로 4개 비행사단, 2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력여단, 지상방공부대, 지휘부 및 직속부대로 편성되었다.

20여개소의 작전기지에 1,690여 대의 항공기를 배치하고 40여 개소에 레이더기지와 자동화된 방공통제체계를 갖추고 있다.

해군은 6만여 명으로 사령부 예하 동해·서해함대사령부를 두고 13개 전대, 2개 해방저격여단으로 편성되었다.

해군은 총 810여 척의 함정과 1,000여 개소의 해안포대, 10여 개소의 함정대피소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핵무기를 최소 5~7개, 최대 15~20기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1,300여 기의 미사일과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24) 대한민국 국방부, 2008 국방백서, 대한민국 국방부, 2009, 260면.

25) 전방지역에는 1군단(강원도), 5군단(황해도 및 강원도), 2군단(개성 및 황해도), 4군단(사리원, 해주 및 황해도), 중부 및 평양지역에는 3군단(평안남도), 9군단(평양), 2개의 기계화군단은(평양, 평안남도, 황해도), 후방지역에는 6군단(함경북도), 7군단(함경남도), 8군단(평안북도)을 각각 배치되어 있다.

셋째, 대남공작기구를 개편하고 인민무력부에 정찰총국을 신설하는 등 대남공작기구를 강화시켰다.

북한의 대남공작은 현재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 225국에서 전담하고 있다.

정찰총국은 편제상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소속이지만 국방위원장에게 직보 하는 체계(정찰총국장→국방위 부위원장→국방위원장)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철 상장이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으며 정찰총국장이 대남·대외공작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남북한 전면대결태세를 선언하고 남북한 합의 사항 무효화 및 서해 해상분계선 관련 조항 폐기를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가증시키고 있다.

북한은 2009년 1월 1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천명하였다.

1월 30일에는 조평통 성명에서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의 무효화와 남북기본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분계선 관련 조항 폐기”를 발표하였다.

2010년 1월(27~28)에는 백령도와 대청도 부근 NLL 북한 해역에서 100여 발의 포탄을 발사하였다.

2월(5~8일)에는 서해 해상사격구역을 선포하였고 3월 26일에는 천안함폭침사건을 감행하여 왔다.

3. 주변국가의 안보정책

가. 미국의 안보정책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국가이익과 국가목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근본적 가치와 제도 및 국민들이 안전한 가운데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서의 미국의 생존을 두고 있다.

둘째, 국가안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건전하고 발전하는 경제이다.

셋째, 맹방 및 우방들과의 건전하고, 협력적이며, 의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다.

넷째, 정치·경제적 자유와 인권존중 및 민주적 제도들이 꽃피는 안정되고 안전한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다.

안보정책은 외교, 경제, 군사정책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동맹관계를 강화시키고 국제기구 참여도 증진, 국제협상력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경제적으로는 외국에 대한 경제·군사원조, 기술이전 및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불량국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데 두었다.

군사적으로는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였거나 국익에 심대한 피해를 야기할 경우 군사력을 사용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 안보정책의 기본방향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미국의 군사력이 전쟁을 억제하고 힘을 투사하며 국익수호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자유 무역과 안정된 국제 통화체제의 확충을 통해 경제발전과 정치적 개방(Political openness)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③ 미국적 가치와 평화, 번영(Prosperity) 그리고 자유 증진의 부담을 공유하는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이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④ 국제 정치적 강대국 특히 러시아 및 중국과의 포괄적인 관계정립에 노력한다.

⑤ 깡패 국가들(rogue regimes)과 적성 국가의 위협 특히 테러나 WMD 개발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²⁶⁾을 제시하였다.

21세기에 미국은 보다 복합적인 안보이슈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

① 탈공산주의 또는 탈전체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에 따른 혼란과 불확실성, ② 민족·영토·종교·분쟁의 심화, ③ 테러, 마약밀매, 환경오염, 천연자원의 고갈, 인구급증, 난민증가 등과 같은 초국가적인 문제들의 대두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① 지역패권 추구, ② 종족, 종교, 부족집단간의 분쟁, ③ 대량과 괴무기의 확산, ④ 전지역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부전복활동과 무질서, ⑤ 환경보전, ⑥ 마약거래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²⁷⁾

미국이 지향하는 국가전략은 지도국가로서 관여, 국익 우선의 선별·선택, 국제적 협력안보 개념의 확산 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선별적 확대관여 전략이다.

안보전략은 대체로 국가안보의 증진, 국가번영의 도모,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국가이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① 고립주의

26) Condoleezza Rice, "Promoting the National", Foreign Affairs Vol.79, No.1, January/February 2000.pp.46~47.

27) 김재창, 앞의 책, 382~383면.

전략, ② 확대 관여 전략, ③ 관여 전략, ④ 협력적 안보전략, ⑤ 영향력 확보전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는 둘 이상의 전략을 종합한 전략²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북아지역에서는 지역패권 등장을 억제하고 안정을 유지하면서 지역질서의 변화를 관리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여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면서 한반도의 전쟁발발을 억제하고 중국의 포괄적 참여정책을 유도하여 이 지역 국가들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동북아지역의 긴장 완화²⁹⁾를 추구하고 있다.

향후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동북아 지역의 기존 질서 유지를 보장하는 균형자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① 동북아지역에서는 아직도 냉전이 해소되지 않은 채 불안정한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민족대립, 영토분쟁 등의 위험성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미군의 전방배치는 이 지역의 분쟁을 해소시킬 수는 없지만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고 분쟁을 국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③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미군의 전방배치는 이 지역의 세력균형에 계속해서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④ 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에 미군을 전진 배치시키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28)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앞의 책, 52~55면.

29)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대한민국 국방부, 1996. 34면.

⑤ 일본의 관대한 재정지원으로 인해 주일미군의 주둔경비가 저렴하다는 판단이다.

⑥ 미·일 안보체제의 유지와 주일미군의 전방배치는 동아시아지역의 주요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불가결한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 중국의 안보정책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국가목표는 부국강국의 통합된 국가를 유지하고 종합국력을 신장하여 21세기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확보하는데 있다.³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내적으로는 정치·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최우선 과제를 부여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및 점진적 정치체도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21세기 다극화 세계질서 구축을 목표로 하여 국제정치 및 경제 질서 구축과 중국의 자주적 권리확보를 중점에 두었다.

안보정책은 종합적 국가방위와 경제발전의 여건조성, 정권안보 유지, 국가적 통합유지, 주권 수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대외 및 안보정책의 원칙으로 반패권주의를 강조하면서 한반도에서 안정 및 평화유지와 영향력 확대를 제시하였다.

안보정책의 기본방향으로는 과거 ‘중화문명의 영광’을 부활시켜 나가면서 중국의 대내외적 경계론을 일소시키고, 중국이 지향하는 종합국력의 증대를 위한 유리한 안보환경을 창출해 나가는데 두었다.

중국이 한반도에서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

30) 황병무, 신중국군사론, 법문사, 1995. 30면.

다.³¹⁾

① 한반도에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경우 지정학적으로 인접하여 있는 중국의 안보에 엄청난 부담이 가중될 것 이라는 판단이다.

② 중국과 혈맹국가의 관계에 있는 북한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할 경우 초래할 여파에 대한 우려하고 있다.

③ 국내적 경제발전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의 불안이 자국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안보전략은 신국제질서 하에서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되는 억제력의 구축을 통해 아·태 및 동북아시아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전략적 주도권 확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³²⁾

더구나 러시아와 군사·경제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동반자관계 유지 및 자국의 군사전략을 국경방어에 중점을 두어 왔다.

중국 공산당 제5차 대회에서는 아시아의 군사강국을 달성하고 2049년까지 미국과 대등한 군사강국을 달성해 나간다는 장기목표³³⁾를 수립하고 미래전에 대비한 신속대응 첨단전력과 상륙 합동작전능력 강화를 당면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군 병력을 대폭 감축하고 공군과 해군, 미사일 전력을 강화³⁴⁾시켜 나가면서 1998년 4월에는 총장비부를 신설하고 총

31) 신상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민족통일연구원, 1998. 4~8면.

32) 국방부, 국방백서(1995~1996), 국방부, 1995. 46면.

33) 중국은 1997년 9월 제5차 당 대회를 개최하고 2049년까지 군사강국 달성을 위한 장기목표(주요내용은 2015년까지는 전략무기 및 첨단 군사력, 신속기동체제, 원양작전과 원거리 정밀 타격능력을 배양시키고, 2020년경에는 1990년에 설정한 그린라인“조어도-대만-인도네시아”을 블루라인“쿠릴열도-마리아나군도-파푸아뉴기니”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하나의 중국정책에 기인하여 대만의 분리 독립을 저지하고 미국의 대만문제 개입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고 있음)를 제시하였다.

34) 육군은 신속대응 공수여단을 3개 사단에서 5개 사단으로 증편시키고, 육군 항공단을 2005년까지 17개를 창설하는 한편 러시아로부터 Su-27, Su-30기를 대대적으로 구입하고,

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군부로 군의 개편을 단행하였다.³⁵⁾

또한 효율적인 정예군을 건설하고 국지전쟁 능력 강화, 군사교류 강화, 안보대화 확대의 국방정책을 내세우고, 국방정책의 목표로 ① 국방력의 공고화, ② 침략의 저지, ③ 무장봉기의 진압, ④ 국가주권, 영토의 보존과 안전의 수호를 제시하였다.

중국은 적극적 방어 군사전략 방침을 추구하면서 강대하고 확고부동한 국방의 건립을 중국의 현대화 건설의 전략적 임무³⁶⁾로 내세웠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새로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중국의 전략적 이익 수호 및 대만 통일을 위한 포석으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더구나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와 전역미사일방어체계(TMD)가 중국의 주권과 군사력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를 저지시켜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의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경제·군사적으로 무장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³⁷⁾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냉전구조의 청산과 평화체제의 구축 등 한반도 문제 해결정책에 있어 과거의 피동적·우회적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남북한 주도의 평화통일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대외정책의 기초를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³⁸⁾으로

Su-27기를 자체로 조립생산 하고 있다.

해군에 순양함 2척을 새로구입하여 4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핵 추진 잠수함을 1척에서 5척으로 증가시켰다. 다양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이내에 10,000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35) 오수열, “90년대 중국의 군사정책과 한국의 대응” 한국동북아논총, 제2집, 한국동북아학회, 1996. 629~649면.

36) 국방정보본부, 2006년 중국 국방백서, 국방정보본부, 2007, 6~9면.

37) 민주평화자문회의, “통일논의 리뷰”, 2005. 1, 민주평화자문회의, 2005. 106~107면.

예상되고 있다.

다. 러시아의 안보정책

러시아가 추구하는 국가안보의 목표는 러시아 영토와 주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다. 또한 러시아 동맹국에 대한 전쟁과 기타 무력분쟁을 억제·방지하고, 러시아 동맹국이 침략을 받았을 경우 침략 격퇴와 동시에 적을 섬멸하는 데 두고 있다.³⁹⁾

안보정책의 기본 목표는 군사안보에 대한 비중을 회복하고 유라시아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추구하면서 미국의 단극화된 국제질서에 대응하여 중·러·EU와 연대를 모색하여 중·러 국경지대의 안정화, 동북아 지역에서 반러시아 동맹 형성 및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핵무장화를 저지시키는데 두었다.

안보의 위협적인 요소로는 러시아 영향력 강화에 저항하고, 러시아 국가이익 실현에 방해하며, 전세계(유럽, 중동, 카프카스, 중앙아시아 및 아태지역 등)에서 러시아의 지위를 약화시키려는 타국가의 시도 등을 중점에 두어 왔다.

러시아의 안보전략은 다음과 같은 위협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

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새로운 핵무기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② NATO 회원국들에 대한 범위확대와 UN 안전보장의 위임도 없이 군사개입의 범위를 동맹국 영토 밖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38) 외교안보연구원, “2002년 국제정세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2. 37~42면.

39) 국방정보본부, 러시아 군사총람, 국방정보본부, 2008, 83면.

표명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러시아가 추구하는 안보정책의 목표⁴⁰⁾는 다음과 같다.

① 역내 신국제질서 재편과정에 적극 동참하여 자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것이다.

② 일본의 재무장 및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면서 중국의 반러화를 방지하는데 있다.

③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역내 군축 실현 및 다자간 안보기구를 창설하는데 있다.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서 양자 및 다자간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일본의 영향력 확대, 중국과의 국익대립 가능성, 한반도 상황의 불안정, 역내 국가간의 영토분쟁 가능성, 경제관계의 불균형 등에 우려감을 표시하여 왔다.⁴¹⁾

대한반도정책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평화로운 환경을 유지하고,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통한 실리를 추구하면서, 아태지역 진출을 위한 외교·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⁴²⁾

이와 같이 러시아는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한국과는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북한과는 정치·군사적 이익을 증진시켜 나간다는 이중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러시아는 중-러, 미-일 동맹사이에 균형 있는 협력관계 추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난으로 첨단 군사력 건설에 이미 한계에 봉착한 러

40) 김강녕,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국의 대한반도정책”, 21세기 한국국방의 과제와 전망, 한국국제정치학회 국방관련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6. 9. 100면.

41) 성영화, “신국제질서하의 한반도 통일외교전략 연구” 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 1996. 66면.

42) 강원식,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 한반도통일문제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논총 제5집, 관동대학교 동북아평화연구소, 2000. 2면.

시아로서는 제3세계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동북아시아의 영향력 회복에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⁴³⁾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전통적인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남북한에 대한 균형정책을 추구하면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개입정책을 모색하고 중·미·일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라. 일본의 안보정책

일본의 안보정책은 미·일 안보체제 및 한·미·일 삼각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역할을 증대시키면서 군사력의 지속적인 증강을 통해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 및 긴장완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는 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1990년에 외교 목표와 방향으로 ① 평화와 안보 확보, ② 자유와 민주주의 존중, ③ 시장개방경제를 통한 세계 번영, ④ 인류가 혜택 받는 환경보장, ⑤ 대화와 협력을 통한 안전한 국제관계 조성⁴⁴⁾을 제시하였다.

2000년에 작성한 국가전략보고서에는 일본 외교의 기본 목표가 ‘열린 국익’(enlightened self-interest)⁴⁵⁾이며, 정책수단으로는 복합적인 상호

43) 러시아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으로부터 1순위 대상은 인접해 있는 구소련 공화국들이며 2순위는 유럽, 3순위는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이다.

CIS 통합안보체제 구축의 실패와 NATO의 동유럽 확대에 이어 코소보 전쟁까지 경험하고 난 러시아는 구소련지역과 유럽에서 위축된 국제적 지위와 안보공간을 새로운 동방정책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보상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일본과는 적대관계청산과 평화협정 체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북·러 관계의 급속한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힘쓰고 있다.

44) 조명현, 한국의 국가안보, 교학연구사, 1999. 96면.

45) 일본은 자국민의 이익증진을 도모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는 상호성을 견지하면서 우호국을 늘리고, 국제환경의 개선을 통해 스스로의 필요를 우회적으로 채워가고자 하는 장기적·간접적인 접근법으로 정의하고 있음.

의존을 추구하는 ‘시빌리언파워’(civilian power)를,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틀로는 종합·중층적 안전보장론⁴⁶⁾을 내세웠다.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의 안보전략은 미·일 안보동맹에 기초⁴⁷⁾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이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21세기 정치대국을 지향하면서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발전에 따른 증대된 일본의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영향력 확대와 더불어 독자적 영역의 확보를 추구하고 나섰다.

현 시기 일본의 방위정책⁴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냉전이후 전략 환경을 반영하여 방위대강을 대폭 수정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둘째,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그 틀 속에서 군사적 역할 확대를 모색하였다.

셋째, 군사력의 합리화·효율화를 꾀하고 장거리 투사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 등 전력의 질적 향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넷째, 유사법제의 도입과 집단자위권의 인정 등 보통국가에 걸맞은 군사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PKO 등 국제협력에 참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일본의 군사력은 총병력 24만 명(육군 15만 명, 해군 4만 5천 명, 공군, 4만 5천명)으로 전차 1,040대, 장갑차 1,000대, 항공기 850대

46) 종합적 안전보장(compre 차원에서 적대적 안보환경을 개선하여 에너지, 식량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hensive security)은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적이고, 중층적 안전보장이란 개인 및 국가의 차원을 넘어 지역, 지구적 차원에서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함을 의미한다.

47) 이시형,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한국동북아논총 제10집, 한국동북아학회, 1999. 141면.

48)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위의 책, 96면.

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경항공모함으로 개조가 가능한 수송함 ‘오미스’(8,900톤급), 잠수함 ‘오야시오’(2,750톤), 조기경보기(E2C) 13대, F4 전폭기 110기, F15 전폭기 194기, 이지스함 4척, 조기경계관제기 AWACS 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4기의 첩보위성을 도입 할 것을 계획하는 등 군사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목표는 한반도의 위기상황 발생 방지, 일본에 적대적인 정권수립 저지, 한반도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보를 통한 최대한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데 있다.⁴⁹⁾

일본은 한반도에 대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방안 지지 등을 통해서 한국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바라고 있다.⁵⁰⁾

따라서 한반도문제에서 한국의 대북·통일정책을 지지하면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과의 보조를 맞추어 왔다.

더구나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대한 영향력 확대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것은 남한 중심의 통일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통일한국은 일본에 경제적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

향후 일본은 정예의 기술집약군으로 2,000 해리 범위의 해상 기동타격력, 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작전 항공력, 육·해·공군 전력을 동원하는 3차원의 합동작전 능력을 지향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⁵¹⁾

49) Jungsuk Youn, Japanese Attitude to the Question of Korean Unification, "East Asian Review", Vol. IV, NO. 1(Spring 1992), p.33.

50) 신용하, 신일본패권주의와 한일관계, 김영사, 1993. 263~340면.

전술한 바와 같이 탈냉전시대에서도 한반도 주변 4강은 이념보다는 각국의 실익에 기초한 양자관계를 재정립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나가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중국과 각각 전략적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정상급 회담을 정례화 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중국과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본과는 1997년 관계를 정상화하여 우호 협력관계를 확대시켜 나가는 추세이다.

주변 4강이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정책⁵²⁾은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다.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다소 조정이 되고 있으나, 통일이후에도 한·미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부분적으로 자주성을 확대하면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자국의 이해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미국과의 협력 하에 한국과의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두개의 한국 정책을 고수하면서 북한을 동맹국으로 존속시키고 남한과는 경제관계를 확대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1) 심경옥, “주변국의 군사혁신 비전과 전략, 그리고 잠재력 판단”, 전략연구 제17권,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0, 227면.

52) 김학준 외, 21세기 한민족 통합론, 인천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2000. 59~60면.

Ⅲ.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

1. 대남공작기구

북한의 대남공작은 과거 당 비서국에 대남공작을 총괄하는 대남사업 담당비서를 두고 통일전선부 부장이 대남사업담당 비서를 겸직하면서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 35호실, 작전부를 총괄하여 왔다. 또한 인민무력부 정찰국과 국가안전보위부 반탐국 및 대외정보국에서 각기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요 사안에 대해 특별팀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왔다.

최근에는 대남공작기구를 개편하여 인민무력부에 기존의 작전부와 35호실, 인민무력부 정찰국을 통폐합하여 정찰총국을 신설하였다.

현재 정찰총국이 대남·대외공작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찰총국은 편제상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소속이지만 정찰총국장→국방위 부위원장→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찰총국은 남한혁명 수행의 기본 임무를 담당 수행하고 있으며, 통일전선부는 조국통일완수 임무를 단당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은 “남조선에 대한 집중 포위작전을 전개하여 혁명의 가능성과 여건을 의도적으로 조성해서 이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혁명을 추진시키고 완수해야 한다”⁵³⁾고 강조하여 왔다.

김정일이 제시한 대남 집중포위 작전은 조직·사상·정치·반정부

53) 신평길, 앞의 책, 168~169면.

투쟁 · 대외 · 군사공세를 말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지하당 조직공작을 직접 또는 우회방법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 ② 대남 정치선전선동과 정치적 영향력을 주는 정치공세를 강화한다.
- ③ 대외활동을 통한 다양한 정치공세와 영향력을 강화시켜 나간다.
- ④ 남북대화를 통한 정치공세를 강화한다.
- ⑤ 남한에서 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한층 강화시켜 나간다.
- ⑥ 군사력 증강과 군대의 현대화를 이룩하여 부단한 군사적 위협을 가증시켜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 통일전선부

통일전선부는 대남정책의 핵심부서이며 통일전선 공작을 주관하는 부서이다. 1977년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신설되었다.

부장 이하 7개부부장과 30개과, 연구소, 연락소, 전위단체 등으로 편성⁵⁴⁾ 되어 있다.

주요 임무는 남북회담, 해외교포 공작, 대남 심리전 및 통일전선 공작, 국내 좌익운동권의 지도 업무 등을 담당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부서로는 직접침투과, 남북회담과, 해외담당과, 통일정책연구원, 외각단체⁵⁵⁾가 있다.

54) 국방부, 국방백서(1996-1997), 국방부, 1996. 57면.

55) 외각 단체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반제민족민주전선,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재북통일촉진협의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를 두고 있다.

나. 225국(구 대외연락부)

225국은 대남공작의 주무부서로 공작원 밀봉교육과 남한 내 지하당 구축 및 해외공작을 주 임무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225국은 남한혁명의 주력군을 포섭하기 위한 공작에 몰두하며 직접 한국 내 주사파와 같은 좌익세력과 반정부인사들을 포섭하여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사회의 교란을 획책하면서 국내 좌익핵심세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서이다.⁵⁶⁾

남한 내 지하당 건설을 비롯하여 정당, 사회단체, 군부에 대한 공작거점을 구축하고 통일전선 형성, 공작전술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하여 왔다.

현재 서울·경기·강원·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 담당과 및 사회 지도층 담당과, 해외담당과 등 세부조직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해외교포 및 공작자금을 조달하는 위장무역회사인 대성총국을 운영하고 있다.

과장 예하 5~6명의 지도원을 두고 있으며, 지도원 1명의 2~3개 군을 담당하면서 공작활동을 조직·지도·감독·운영하고 있다.

다. 정찰총국

정찰총국은 작전국, 정찰국, 해외정보국 예하 6개국으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부서의 임무는 제1국은 간첩 양성 및 교육기관 운영업무를, 제2국

56) 柳東烈., 앞의 책, 205쪽.

은 암살, 폭파, 납치 업무를, 제3국은 공작 장비 개발업무를, 제5국은 대남 및 해외정보 수집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찰국 소속에는 4개의 저격여단, 5개 정찰대대, 907부대, 38항공육전여단 등이 있다.

1) 작전국

작전국은 침투공작원들에 대한 기본교육 훈련, 침투공작원 호송, 안내, 복귀, 대남테러공작, 대남침투루트 개척 등을 주 임무로 하고 있는 부서이다.

국장 예하 김정일정치군사대학과 6개의 파견기지(연락소)를 두고 있다.

김정일정치군사대학은 대남사업요원 및 공작원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본 대학은 5년제 교육기관으로 평양시 룡성구역 신미리에 위치하고 있다.

매해 300~400여 명의 공작원을 배출시키고 있으며, 금강산·묘향산·철보산지구 등에 4개의 분교와 이남환경실습관을 갖추고 있다.

공작원 선발은 대남관련자의 자녀, 혁명가유자녀, 당성이 강하고 체력 및 두뇌가 우수한자 중에서 엄선하여 선발하며 사격, 격술, 폭파, 수영, 잠수, 낙하산, 침투, 납치, 통신, 운전교육을 비롯하여 지하당 조직운영방법, 지하당 사업원칙, 잠행기술 등 고도의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있다.

파견기지는 해상연락소 4개와 육상연락소 2개를 갖추고 있다.

해상연락소는 해외 침투 및 대남공작을 기본임무로 하고 있다. 평양시에는 간첩 침투 및 복귀호송 안내, 해상군사 및 지형정찰 납치, 침투루트 개척 및 무인포스트 발굴이며 전시에는 해상유격전, 폭파전, 게릴라물자공급 등의 임무를 담당 수행한다.

청진연락소(청진시 신암구역), 원산연락소(원산시 북망산 일대), 남포연락소(남포시 남포구역), 해주연락소(해주시 양지리)를 두고 있으며, 각 구간 담당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주연락소는 서해 군사 분계선 이남↔목포 이북해역을, 남포연락소는 목포↔거제도↔제주해역을, 원산초대소는 동해 군사 분계선 이남↔부산가덕도↔일본지역 해역을 담당한다.

육상연락소는 육상침투간첩 안내 및 복귀 호송, 침투당당구역 루트개척·지형정찰 등의 임무를 담당 수행하고 있다.

사리원연락소(사리원시)와 개성연락소(개성시)가 있으며, 사리원연락소는 동부지역↔중부지역을, 개성연락소는 중부지역↔서부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작전국은 5년 단위로 남한 관련 모든 자료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6개의 초대소에서는 연간 70여 명, 1회 4개조 이상이 남파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작전 실패 비율은 2%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⁵⁷⁾

2) 정찰국

정찰국은 편제상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정찰국 소속이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찰국의 주요 임무는 무장공비 양성·남파·해방구 형성을 위한 유격전 전개·요인암살·산업시설 파괴·군사정찰·납치 및 대남 군사정보 수집, 정규전 부대 공격지원 및 교란작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장 예하 지휘부, 직속부대, 4개의 저격여단, 5개의 정찰대대, 448군부대, 남포해상특수부대, 해상처, 12개의 지원부서로 편성되어 있다.

57) 김병곤, “北韓의 對南工作 戰術”, 保安實務課程, 警察搜查保安研修所, 2004. 314~315면.

주요임무는 총참모부와 경보교도지도국에 적절한 정보 제공, 주요 전략 및 전술목표를 공격 파괴하고 테러 및 혁명집단 군사훈련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여단의 총병력은 4,200여 명으로 지휘부와 직속부대, 10개 정찰대대로 편성되어 있다. 전투 기본 단위는 10명이며 전원 장교(군관)로 구성되었고 특수작전의 경우 3~5명의 정찰조로 운영하고 있다.

정찰국 직속 24정찰대대는 평양에 위치하며 집체격술 시범부대이며 대남침투 임무를, 69정찰대대는 해외침투를, 71·72정찰대대는 공중낙하 전담 특수 임무를 전담하는 부대이다.⁵⁸⁾

448군부대(원산시 두방리)와 남포해상 특수부대(남포시 검덕리)는 정찰국 산하기지이다.

본 부대의 임무는 정찰국 소속 간첩 및 무장계렬라 등을 동·서·남해상의 호송안내와 침투루트 개척, 무인포스트 발굴 및 매몰 등의 임무를 담당 수행하고 있다.

해상처는 처장 예하 지휘부 및 직속부대, 3개의 침투기지(2·3·4기지)와 22전대⁵⁹⁾를 두고 있다.

3) 해외정보국

해외정보국은 대외·대남 정보수집과 대남·해외 간첩공작, 국제 및 대남테러 등을 전담하는 부서이다.

김정일과 당 조직지도부의 직접적 지도를 받는 특별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대남 부서들의 사업을 검증 또는 감독을 겸임하는 정보조직으로

58) 김현기, “북한 특수부대의 실체”, 국방저널 2001년 11월, 29~32면.

59) 22전대는 인민무력부 정찰국 특수부대 요원을 잠수함으로 은밀하게 침투시키는 해상침투부대임.

알려졌다.

주요임무는 “긴급 대남·대외정보를 통해 시기별 특성에 따라 제때에 대남·대외정책 실행방안을 수립할 것을 목적으로 평시에는 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그에 입각한 행동을 통해 목적을 달성함과 함께 통일전선부 사업의 검증에 필요한 정보수집과 그 사업을 측면으로 지원”하는 임무를 담당 수행한다.

또한 대남·대미·대일공작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일전선부 사업에 대한 객관적 및 현실 검증과 나타난 결함에 대한 해결방도를 제시하고 그 실행을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바, 그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시기별로 중요 대상들에 대한 정보 수집과 테러 파괴공작, 인원 유인·납치·음해공작 및 유언비어 유포 등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건을 조직하여 실천하여 왔다.

해외정보국의 편제는 구 대외정보조사부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장 예하 2명의 부국장과 대남정보조사과·대일정보조사과·국제정보조사과·대미정보조사과·동남아정보조사과·종합과·작전과, 교육과 등을 두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⁶⁰⁾

해외정보국은 주재국의 영주권과 위장 장기거주자들, 위장사업가들, 유인 흡수된 현지인등을 중심으로 꾸려진 아지트 외에 해외의 필요한 지역들에 각종 명목으로 수십 개의 대표부와 대표들 속에 전문 요원들을 배치해 놓고 있다.⁶¹⁾

특히 작전과 소속의 300여 명의 특수부대는 언제 어디서나 침투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은 영어·일어·중국어·러시아어·스페인어·아랍어·힌두어 등 각국 외국어 실력자 및 남한식 발음과 한

60) 과별평균 인원은 7~8명에서 12~13명으로 예상되며, 종합과와 작전과는 25~30명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된다.

61) 김정민, “북한노동당 35호실 무엇을 하는 곳인가”, 북한 2000년 5월호, 북한연구소. 2000. 81~83면.

국 사회생활 습득자들을 배치해 놓고 있다.

2. 주요 대남도발 사례분석

북한의 대남도발은 해방 이후 북한 내부의 실정과 한국의 정치·사회적 변화, 주변정세 및 남북관계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면서 끊임없는 도발을 감행하여 왔다.

해방 이후 사회주의 동방초소를 북한에 구축하기 위해 한국전쟁을 도발하였고 휴전협정체결 이후 1960년대에는 제2의 월남화를 획책하기 위해 대·소규모의 무장공비를 본격적으로 투입하였다.

1970년대에는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호언장담하면서 한편으로는 남북 대화를 모색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침용 땅굴을 굴착하는 이중성을 보여 왔다.

1980년대 들어서서는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주한미군 전면 철수를 주장하고 소위 남한 해방의 결정적시기조성을 촉구하면서 86아시안 게임 및 88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온갖 책동을 자행하였다.

1990년대에는 김일성 사망과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김대중 정권의 지속적인 햇볕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북한은 강릉잠수함침투사건과 연평해전 등을 감행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서는 2차에 거친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남북 대화의 단절과 재개, 지속적인 대남군사도발을 추구하는 한편 2010년 3월 26일 천안함폭침사건을 자행하였다.

이하에서는 북한의 주요 무력도발을 청와대기습미수사건,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사건, 휴전선 땅굴굴착사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강릉잠수함 침투사건, 서해교전, 천안함폭침사건으로 한정하여 이를 정밀 분석

검토하고자 한다.

가. 청와대 기습미수사건

1) 사건 개요

청와대 기습미수사건은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민족보위성 정찰국 산하 124군부대의 한개 소대 병력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고 대통령을 살해할 임무를 받고 서울에 침투한 사건이다.⁶²⁾

정부는 합참본부에 대간첩작전지휘소를 설치하고 무장공비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서부전선의 3개 사단과 32전투단, 미 2사단을 투입하여 합동수색작전을 전개하는 한편 서울시내 등 후방지역의 간첩색출 및 경비를 위해 수경사, 30·33예비사단과 6관구 일부 병력을 경찰과 합동으로 외곽지대를 포위 혹은 차단시키는 수색작전을 전개하였다.⁶³⁾

군경합동 수사대는 1968년 1월 30일까지 31명의 무장공비 중 27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하였다. 아측은 전사 36명 중 군인 24명(15연대장 이익수 대령 포함), 경찰 2명, 미군 2명, 민간인 8명, 부상 68명의 큰 피해를 입었다.⁶⁴⁾

2월 중순 3명의 행방불명자 중 1명은 경기도 양주군에서 시체가 발견되었고 무장공비 2명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어 작전을 종료하였다.

당시 북한은 5.16 군사혁명을 계기로 남한의 반공태세가 강화되자 이에 자극을 받게 되었고 124군부대로 하여금 청와대를 기습하여 대통령을 살해하고 미 대사관·육군본부·서울교도소와 간첩수용소를 폭파하

62) 김기중, “한·미 연합방위 체제하의 위기관리 형태 고찰”, 국방대학원, 1992. 15~18면 : 조선일보, 1968. 1. 23.

63) 이영린, “한·미 위기 인식과 정책결정”, 국방대학원, 1999. 49~50면.

64) 김명중, 북한관련 한미간 안보정책 마찰 사례 분석, 한국국방연구원, 2001. 12~13면.

고 간첩의 월북을 인솔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공격 목표가 광대하고 지역 분산의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하에 1968년 1월 13일 기존계획을 수정하여 공격목표를 청와대로 한정하였다.⁶⁵⁾

최초에는 76명의 특수공작원을 선발하여 훈련하였으나, 최종 31명이 발탁된 것이다. 이들은 침투, 습격, 탈출조로 나누어⁶⁶⁾ 청와대 내부 구조를 분석하고 주요 지점별로 공격조를 나누어 훈련한 후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위치한 황해북도 인민위원회 청사에서 최종 실전연습을 마쳤다.

1월 16일 버스를 이용하여 황해북도 연산군에 위치한 124군부대를 출발하여 개성까지 이동하였다. 20대 초중반으로 구성된 특수공작원들은 31명 전원이 장교(군관)로 편성⁶⁷⁾ 되었으며, 한국군 26사단 마크가 부착된 국군복장에 AK소총 1정, 실탄 300발, 권총 1정(TT), 수류탄 16개(대전차 수류탄 8개, 방어용 수류탄 8개), 단도 1개씩 총 군장은 24Kg를 휴대하였다.

이들은 개성에서 환송식을 마치고 “수령 동지의 명령대로 임무를 수행할 것”을 혈서로 맹세한 후 조별 임무를 최종 점검하고 돌아 올 때의 초소와의 접선암호는 611로 정하였다.

17일 새벽에는 비무장지대 연천군 매현리에 도착하였고, 20:00에 2사단 지역의 철조망을 절단기로 절단하고 고랑포 지역의 임진강을 건너 1월 18일 05:00에 법원리 뒷산에 도착했다.⁶⁸⁾ 이곳에서 휴식을 취한 후

65) http://blog.naver.com/5tank_0799:http://cafe.daum.net/rokmc_9338.

66) 침투조는 청와대 보초 제거 및 경계 임무, 습격조는 청와대 내부 공격 및 철수 임무, 탈출조는 청와대 경내 차량 탈취 및 도주임무가 주어졌다. 특히 습격조를 4개조로 세분하여 제1조 청와대 2층 습격 박대통령 살해, 제2조 청와대 1층, 제3조 경호실, 제4조 비서실에 침입하여 전원 살해 후 도주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67) 대위 1명, 중위 1명, 소위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68) 고랑포 미 2사단 지역을 통과지점으로 택한 것은 이 지역이 국군 25사단과 경계지역이며

시간당 10Km 속도로 법원리-미타산-앵두봉-노고산-진관사-북한산으로 행군하였다.

그러나 1월 18일 14:00에 파주군 초리골에 화목작업을 하러갔던 우성제를 포함한 네 형제에게 우연히 발견되었는데 결국 이들을 살해하지 못한 것이 작전의 실패로 돌아갔다.

우씨 형제는 1월 19일 21:00에 파주군 법원리 장현 파출소에 신고하였고, 신고 후 30분 후 군부대에 다시 신고 되었으며 합동참모본부까지의 보고는 무려 세 시간이 지나서였다.

1월 20일 09:30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께 보고하였으며 14:00에 전방지역에서 서울 외곽에 이르는 방어선을 구축했다.⁶⁹⁾

14:00에 경기도 송추유원지 부근에서 무장공비의 흔적을 최초로 발견하였고, 국방부 장관은 채원식 치안국장에게 서울지역에 갑종 경계령을 내려 세검정-정릉-창동에 이르는 축선에 경찰병력 배치를 지시하였다.

1월 21일 20:00에 북한산 비로봉 밑에 공격 캠프를 차린 무장공비들은 21:30분 산길을 내려왔다. 무장공비들은 휴전선을 통과하여 4일 동안 단 한번의 검문도 받지 않은 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침투한 것이다.⁷⁰⁾

이 시각 이각현 서대문경찰서장은 세검정 길을 2열 종대로 걷고 있던 무장공비들을 구평동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목격하고 세검정 파출소에서 서울시경에 “세검정 고개길에서 이상한 옷차림의 군인 30여명이 청운동 쪽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무전기로 긴급보고 한 후 6명의 형사와 함께 무장공비를 추격하여 검문을 하였다.

구형철조망으로 인해 한국군 지역보다는 낙후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고 임진강을 동절기에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계획 하에 은밀하게 침투하였다.

69) 6군단 예하 3개 사단과 김재규 중장의 6관구 병력이 동원됨.

70) 무장공비의 복장은 방한모 차림의 한국군 군복이었다.

무장공비들은 CIC 방첩대원들이며 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 후 종로경찰서 자하문 임시 검문소에서 박태안, 정종수 형사가 공비들을 검문하였다.

2차 검문에서도 무장공비들은 CIC 방첩대원들이며 훈련을 마치고 귀가 중이며 서장에게 알렸다. 우리는 너희와 상대할 사람들이 아니다. 더 알려거든 너의 서장에게 물어보라고 답하였다.

두 형사는 무장공비들의 말투와 억양, 숨겨진 총구가 드러나 있는 것을 목격하고 최규식 종로경찰서장에게 보고한 후 무장공비들을 뒤따랐다.

1월 21일 22:05분 자하문 내리막길에서 무장공비들은 원효여객 60번 버스를 세워 7~8명의 무장공비가 버스에 탑승하였으나 두 형사가 저지하자 차에서 하차하였다.

22:10분 최규식 종로경찰서장이 탄 지프차가 대열 앞을 가로 막고 검문을 시작하였다. 최규식 서장은 나는 종로경찰서장이요, 소속을 밝혀야지요. 외투 안에는 뭐가 들었소 라고 묻자 공비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CIC 사령부가 있는 효자동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종로경찰서장은 여기는 내 담당구역입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는 아무도 못 지나가요. 최규식 경찰서장이 권총을 뽑아들고 저지하였다.

이때 시내버스 한대가 지프차 뒤에 멈춰 섰고 잠시 후 버스 한대가 급정거를 하자 무장공비들은 국군의 출동으로 착각하였다. 공비들은 최규식 서장에게 연발사격을 가하여 살해한 후 버스를 향해 집중사격 하면서 세 발의 수류탄을 투척하였다. 두 형사는 부대장 김춘식에게 수갑을 채우고 쓰러뜨렸고 공비들은 두 형사에게 집중사격을 가해 정종수 형사도 총에 맞아 그로부터 며칠 후 사망하게 되었다.

한밤중에 서울 한 북관에서 총성이 울리자 청와대 외각 경비를 담당하

고 있던 수경사 30대대장 전두환 중령은 즉시 출동명령을 내렸다.

22:30분 무장공비들은 서울 중심까지 침투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지휘관이 쓰러진 후 지휘체계가 마비되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일부는 오던 길을 거슬러 세검정 쪽으로 향하였으며, 일부는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으로, 일부는 인왕산을 따라 북으로 탈출로를 모색하였다.

22:40분 수경사 30대대는 전두환 중령과 장세동 소령의 지휘 하에 81mm박격포 10여문에서 조명탄을 발사하고 밤새 북악산 일대를 대낮 같이 밝히고 작전을 수행하였다.

22일 새벽 01:30분 김신조를 생포하였다.⁷¹⁾

군은 미군의 SR-71 정찰기를 이용하여 항공사진으로 124군부대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23일 13:00에 북한산에서 한명의 공비가 사살되었으며 나머지 공비들은 서울 외곽으로 완전히 빠져나갔다.

1월 24일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전군비상령을 하달하고 정전위원회를 통해 항의하였다.⁷²⁾ 17:00에는 정부와 여당연석회의를 대통령 주관 하에 진행하였고, 1월 25일 정일권 국무총리는 미국 측에 강력한 응징조치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미국 측은 무장공비들의 청와대기습사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1월 27일 오전 11:00에 유엔군사령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대간첩본부장 등이 참석한 한미 군 수뇌부회의를 개최⁷³⁾하여 본 사건과 관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상 외부로부터의 무력공

71) 김신조는 124군부대 소속이며 31명이 국군복장으로 침투하였다고 밝혔다.

72) 24일 UN군사는 제261차 군사 정전위원회를 소집하여 무장공비의 서울침입은 극악한 도발과 침략의 새로운 형태의 일부라고 지적하고 이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73) 이영린, “한미위기 인식과 정책결정”, 냉전시 한반도 위기를 중심으로, 국방대학원, 1999. 49~50면.

격으로 보고 조약의 보완, 한국의 발언권 강화 등을 요구하였다.

6월에는 국회 외무, 내무, 국방위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국가방위 및 안전보장태세 확립에 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대북공격을 독자적으로 계획하였고, 포터대사에게 이틀이면 평양입성이 가능하다고 공헌⁷⁴⁾하였으나 미국에 의해 억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합동 수사대는 1968년 2월 중순 31명의 무장공비 중 27명 사살, 1명 생포, 1명, 사체발견, 2명은 도주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작전을 종료하였다.

그러나 아측의 피해도 전사 36명 중 군인 24명(15연대장 이익수 대령 포함), 경찰 2명, 미군 2명, 민간인 8명을 비롯하여 부상 68명의 큰 피해를 입었다.⁷⁵⁾

2) 종합평가

본 사건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대통령 관저를 습격하여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엄중하고 중대차한 사건이었다. 31명의 무장공비들은 색출하기 위해서 군경 합동작전으로 수개의 사단 병력이 수색 및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였으나 결국 2명이 도주하였고 아측의 인명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하였다.

중요한 것은 무장공비 한개 소대 병력이 휴전선을 침투하여 4일 동안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무방비한 상태에서 단 한번의 검문, 검색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당시 군경의 경계근무 상태는 그 만큼 헤이되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74) 동아연감, 동아일보사, 1968, 411면.

75) 김명중, 북한관련 한미간 안보정책 마찰 사례 분석, 한국국방연구원, 2001. 12~13면.

더구나 무장공비들을 발견하고도 신속한 소탕작전을 전개하지 못하여 공비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서울 외곽을 완전히 벗어난 후 대다수의 공비들을 살상하게 되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타격 및 국제적 공조노력도 대단히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① 본 사건은 한미간 위기인식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그것은 북한이 한국의 대통령관저를 기습하여 최고통치자를 암살하려 한 무장공비침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단순한 무장공비침투사건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② 본 사건은 당시 UN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 하에서 수행되어야 하였으나, 한국군 위주로 이루어지는 등 한미간의 공조체제가 미흡하였다.

③ 정부는 한미간 공조체제 하에 미국의 강력한 응징 보복조치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단순한 무장공비사건으로 인식하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UN군 사령관 차원에서 한국의 대간첩작전을 지원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이다.

④ 31명의 무장공비가 4일 동안 단 한번의 검문도 받지 않고 휴전선을 통과하고 서울을 확보하는 등 휴전선 철책 경계근무 및 수도권 경계근무의 허점이 드러났다.

⑤ 군경합동작전은 서울·경기지역에서 갑호비상으로 전개되었지만 2명의 무장공비가를 북으로 탈출하는 작전의 허점을 보였다.

⑥ 최초 신고 후 2일 동안 무장공비의 행적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무장공비들과의 대치상태에서 사전 전투경험 및 작전지휘체계운영의 미숙으로 많은 전사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본 사건을 계기로 독자적인 대침투작전 수행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1968년 4월 17일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미국이 대간첩작전계획 강화방안 지원 및 대간첩작전의 경우 예비군을 포함한 한국군 전체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 책임 하에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반공·승공 정신을 함양시키고, 북한 정권의 허구와 기만성을 대대적으로 폭로하는 한편 국민의 결집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 울진 · 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1) 사건 개요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침투사건은 1968년 10월 30일~11월 2일까지 무장공비 120명은 돌과 대검 등으로 주민들을 난폭하게 살해하고 한국사회의 혼란을 야기 시키면서 공포분위기 조성을 시도한 사건이다.

군경은 대간첩본부의 작전지휘 하에 향토예비군과 합동으로 11월 16일까지 31명의 무장공비를 사살하고 2명을 생포하였으며, 1968년 12월 28일까지 2개월간의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여 120명의 무장공비 중 113명 사살, 7명 생포하여 작전을 종료하였다. 그러나 아군의 피해도 전사 82명, 부상 67명의 큰 피해를 감수하여야 하였다.⁷⁶⁾

당시 북한은 한국에서 4.19 및 5.16혁명이 발생하였고 대남도발이 격화되었던 시기에 청와대 기습미수사건의 실패를 만회하고 한국에서 민중봉기를 획책하기 위한 유격근거지 거점 마련 및 재 남침의 가능성을 시험하고자 하였다.⁷⁷⁾

76) <http://blog.daum.net/koreanmarinecors:http://ret.daum.net/detcon>.

77) 북한은 동해안 취약지역에 유격근거지를 확보하고 남한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휴전 후 최대규모의 무장공비를 침투하여 남한사회를 극도로 혼란케 하였고 한반도

김일성은 1968년 9월 9일 공화국 창건 20주년 기념식에서 “남한 혁명은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며 이 주권의 쟁취 방법은 무력만이 있을 뿐”임을 강조하였다.

김일성의 대남폭력혁명 지령에 고무되어 북한 군부의 강경파들은 남한 지역에 게릴라 활동을 본격화하고 좌파세력을 결집시켜 민중봉기를 획책하기 위해 무자비한 테러와 파괴활동으로 공포분위기 조장, 군경의 전투력을 분산시키고 피로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위조지폐 유통 등 한국 경제의 혼란을 획책하려는 음모를 계획하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민족보위성 경찰국 산하 124군부대에서 최종적으로 특수요원을 선발하여 1968년 7월 9일부터 4개월간 훈련을 마친 후 1968년 10월 30~11월 2일 3차에 걸쳐 120명을 8개조⁷⁸⁾로 나누어 침투시켰다.

1차 침투는 1968년 10월 30일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 해안 지역으로 2개조 30명이 침투했다.

2차 침투는 11월 1일 경북 울진군 북면 고포 해안으로 2개조 30명이 침투하였다.

3차 침투는 11월 2일 강원도 삼척군 원덕면 월촌리 고포해안으로 4개조 60명이 침투했다.

3차 침투는 해상 및 해안 경계병에게 발견되었지만 아군의 조치미흡으로 침투에 성공하였다.

120명의 무장공비들은 기관단총과 수류탄을 휴대하고 군복과 신사복, 노동복, 사복, 혼합착의 등 다양한 옷으로 변장하여 활동을 전개하였다.

10월 30일 침투한 무장공비 2개조 중 1개조는 11월 3일 06:10분 경

의 군사적 긴장을 조장하였다.

78) 15명이 1개조로 편성되어 4개조가 침투하였다.

북 울진군 북면 주인리 3구 일곱 가구에 침입하여 주민등록용 사진을 촬영한다는 구실로 46명을 방에 감금하였다. 이들은 노동당 입당가입신청서를 배부하고 손도장을 받는 등 회유공작과 살해 납치 행위를 자행하였다.

11월 3일 강원도 삼척군 원덕면 속활리에 침입한 무장공비들은 김영출(32세)의 집에 9명의 마을 주민들을 감금하여 불온뼈라, 서적 등을 배부하고 노동당가입 등을 강요한 후 도주하였다. 이들을 반항하는 주민들을 칼로 찌르고 돌로 쳐서 죽였으며 신고할 경우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까지 하였다.

11월 1일 경상북도 울진군 고평해안에 상륙한 2개조 30명은 울진·삼척·봉화·명주·정선 등지로 침투하여 북한의 책자를 나누어 주고 북한사회의 발전상 등 북한을 찬양선동 하는 정치사상교육을 강요하면서 인민유격대 가입을 강요하였다.

11월 3일 새벽 05:30분 7명의 공비가 울진군 북면 고숫골에 나타나 “경북 경찰대에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찢어주러 왔다”고 주민들을 소집한 다음 사진을 찢고 위조지폐를 나누어주면서 사상 선전을 진행하고 유격대 지원청원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당시 양양군 장성읍에 거주하는 전병두가 나타나자 무장공비들은 대검으로 찢러 살상하고 주민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위협을 가하였다.

삼척군 하장면에서는 80세 노인과 52세 며느리, 15세 손자 등 일가족 세 사람을 난자를 당하였고 평창군에서는 10세 이승복 어린이가 처참하게 살해되었다.

최초 무장공비의 신고는 11월 3일 울진군 북면 고수동 주민에 의해 울진경찰서에 무장공비의 출현을 신고하였다. 11월 4일 14시 30분 무장

공비 침투에 관한 상황을 보고받은 대간첩본부는 강원도 정선·영월·삼척지구에 ‘을중사태’를 선포하고 군경과 예비군을 동원하여 공비들의 퇴로 차단 및 포위망을 구축하여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하였다.

군경의 강력한 소탕작전에 무장공비들은 퇴로가 차단되자 잔당 5명이 12월 9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노동리 계방산 중턱 산간마을로 잠입하였다.

공비들은 밥을 해달라고 위협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사상교육을 하였는데 당시 속사초등학교 계방분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이승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하자 공비들은 이군을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그러나 다행이도 이승복의 형 이학관씨는 36곳이나 칼에 찔리고도 살아남아 공비들의 만행을 생생히 증언할 수 있었다.

아버지 이석우씨는 이웃집 이사를 돕다가 늦게 돌아와 공비들에게 붙잡혔으나 다리에 칼을 맞고도 필사적으로 도주하여 살아남았고 할머니는 이웃집에 갔다가 화를 묘면하게 되었다.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⁷⁹⁾을 보였다.

① 대규모의 무장공비를 반공개적 침투방법으로 은밀하게 상륙, 침투시킨 모험적인 방법을 채택한 점이다.

② 15명의 다수인조로 구성된 무장공비 소조들이 대담한 전술로서 많은 주민들을 동원하여 정치공작을 전개함과 동시에 주민들이 앞에서 배신자를 즉석에서 공개 살해하는 공포전술을 사용하였다.

③ 120명의 무장공비가 군복·신사복·노동복·사복·혼합 착의 등 다양한 변장술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④ 조별 단위로 무장공비 소조가 각 지역으로 분산 침투하여 다액의 공작금(위조지폐)을 사용하고 동일한 유격전 활동을 전개하는 특징을 보

79) 극동문제연구소, 이념교육 지도전서(상), 극동문제연구소, 1988, 735~736면.

였다.

2) 종합평가

본 사건은 휴전 이후 북한이 대규모의 무장공비를 침투한 사건이다. 북한은 청와대기습미수사건의 실패를 만회하고 한국 내에서 민중봉기 획책을 위해 유격근거지 및 재남침의 가능성을 타진하려 하였다.

120명의 무장공비가 다양한 변장술과 동일한 수법으로 주민들을 의식화하고 유격대가입을 강요하는 한편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공개처형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왔다.

무장공비가 침투하여 4일째 되는 날에야 주민 신고가 이루어질 정도로 군경의 경계근무 및 감시 상태가 무방비한 상태였다.

그러나 대간첩본부의 작전지휘 하에 군경, 예비군의 합동작전은 120명 무장공비를 전원 사살,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아측의 인명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등 보완해 나가야 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였다.

① 대규모의 무장공비가 해안으로 침투하여 내륙 깊숙이 잠입하여 침투공작임무를 수행할 때까지도 군경은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해안경계근무의 허점이 또다시 노출되었다.

② 무장공비의 침투를 초기 해안경비병에 의해 발견할 수도 있었으나, 이를 묵살하는 등 군의 초기 대응조치가 미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③ 북한의 대규모 무장공비 침투를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응전력 수립이 미비하였고 아측의 인명 피해가 너무나 컸다.

④ 북한에 대한 대응타격 및 국제적 협력, 재발방지 대책도 미비하였다.

특히 본 사건은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의 산악지대와 농촌마을을 중심

으로 유격근거지 거점 마련의 가능성을 실험하였고 한국에서 월남과 같은 전쟁을 탐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은 필요에 따라 대규모의 무장공비를 침투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군경, 예비군 합동작전으로 무장공비들은 다소 긴 작전기간이었지만 2개월 만에 전원 사살, 생포하였고 우리 군은 북한의 무장공비를 일망 타진함으로써 대간첩작전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의 안보태세를 확립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 휴전선 땅굴 구축사건

1) 사건 개요

땅굴구축사건은 북한이 1972년부터 전방지역에 굴착된 수개의 땅굴을 이용하여 대규모의 특수전병력을 신속하게 대한민국의 주요 요충지역으로 침투시켜 전략지역 및 수도 서울을 강타하고 국군의 최전방 방어선을 순식간에 점령하여 남한의 전략적 요충지역 장악, 게릴라전 및 전면전으로 남한혁명을 승리로 유도하겠다는 의도 하에 추진된 대남 무력도발사건이다.

1974년 11월 15일 남침용 땅굴이 최초로 발견된 후 1975년과 1978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이 땅굴을 굴착한 사실이 폭로되었으며⁸⁰⁾ 1990년에는 제4땅굴이 발견됨으로써 현재까지 발견된 땅굴은 모두 4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발견하지 못한 땅굴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땅굴구축은 1971년 9월 25일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9. 25사업이란

80) 국방군사연구소, 대비정규전사(1961-1980) 2. 1998. 332~340면.

명칭으로 추진되어 왔다.

당시 김일성은 인민군 총참모장 오진우와 대남사업담당비서 김중린을 비롯한 당과 군의 간부들에게 “남조선 해방을 위해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는 지하 침투로를 개척하라”는 전투명령을 하달하였다.⁸¹⁾

중앙당 연락부와 인민무력부 총참모부의 직접 지휘 하에 설계 및 전문 인력은 중앙당에서 파견하였고, 1972년 2월 말부터 3월초 땅굴굴착공사가 시작되었다.

땅굴굴착공사 임무는 각 군단 직속 공병대대에서 수행하였다. 이들 공병대대는 3개 중대 중 1개 중대씩 교대로 투입하여 땅굴 굴착·훈련·휴식을 교대로 병행하면서 추진했다. 따라서 땅굴굴착에 동원된 공병 중대는 3개 소대병력이 1개 소대씩 3교대로 작업·휴식·근무를 병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전방지역 각 군단 지역에 2~3개소의 땅굴 굴착을 목적으로 유사시 땅굴을 이용하여 각 땅굴로 1개 또는 2개 여단의 특수부대를 통과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들 특수전부대로 하여금 전방 및 수도권 지역까지 은밀히 침투하여 비행장, 항만, 지휘부, 기계화부대, 통신부대, 탄약 창고 등 주요 대상물을 조기에 격멸시키고, 수도권 조기석권 및 제2전선부대를 형성하여 미군의 지원 병력을 사전에 차단시켜 전쟁을 최단기간에 종결시키겠다는 강한의지를 갖고 추진하였다.

영국의 권위 있는 군사전문지인 디펜스 위클리(Defence Weekly)지는 1986년 11월 2일자 보도를 통해 휴전선 일대에 북한 특수부대 10만 여 명을 침투할 수 있는 땅굴이 18개가 현재 완공되었거나 완공단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81) 김부성, 내가 판 땅굴, 갑자문화사, 1980, 416~417면.

(1) 제1땅굴(임진강 고랑포)

제1땅굴은 1974년 11월 15일 경기도 연천군 고랑포 동북방 약 8Km 지점인 휴전선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 1.2Km지점 남방한계선을 불과 800m 남겨놓고 발견되었다.

땅굴은 높이 1.2m, 폭 90cm, 지하 45m, 총길이 3.500m, 침투길이 1,000m로 벽은 조립식 콘크리트 벽체이며 천정은 콘크리트와 슬라브로 구축하였다.

영구적 군사시설로 땅굴이 완성되었을 경우 전술능력은 1시간에 1개 연대병력을 통과시킬 수 있다. 궤도차를 이용할 경우 중화기와 포신의 운반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1974년 11월 15일 오전 7시 35분 국군 민정정찰 9명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남쪽을 순찰하던 도중 지하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하였다. 수색조는 지하 46cm를 파헤치고 터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북한은 08:05분 기관총사격을 가해왔다.

11월 20일 8명으로 구성된 한미공동수색조(국군 2명과 미군 6명)는 땅굴의 구조 및 재원을 정밀조사하기 위해 땅굴 안에서 수색작전을 전개하였다. 수색작업 도중 군사분계선 남쪽 30m 지점에서 북한이 설치한 폭발물에 의해 2명이 전사하고(국군 장교 1명, 미군 장교 1명) 6명(미군 5명, 국군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군은 수색과정에서 북한이 땅굴 공사에 사용되었던 소련제 폭약 6상자를 비롯하여 북한제 전화기, 수통, 담배, 삽, 광차 등을 노획하였다.

땅굴 벽에는 북한이 남으로 내려오면서 굴진 진척을 기록한 자료들이 평균 5~6m 간격으로 발견되었으며, 갱도 안에는 전선이 가설되어 220볼트와 60와트의 전등을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갱도안은 레일을 깔고 궤도차를 이용하였으며 일정 구간별 궤도차를 회전할 수 있는 회전로가 마련되어 있었다.

정부는 땅굴구축사건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11월 16일 주한유엔군사령부를 통해 군사정전위원회를 19일 소집할 것을 제의하는 한편 17일에는 유엔군과 북한군의 공동조사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1월 17일 평양방송을 통해 “문제의 땅굴은 유엔군 측에 의한 조작된 정치모략이며 북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억지선전만 되풀이하면서 공동조사를 거부하여 왔다.

(2) 제2땅굴

제2땅굴은 1975년 3월 19일 중부전선 철원 북방 약 13Km지점 군사분계선 남방 900m지점에서 발견되었다.

높이 2m, 폭 2m, 지하 50~160m, 총길이 3,500m, 침투길이 1,100m로의 암석층 굴진 아치형 구조물로 구축되었다.

전술능력은 1시간에 3만 명의 병력과 야포 등 중화기의 통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1땅굴에 비해 2땅굴은 규모가 크고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킬 수 있는 광장을 비롯하여 남방한계선 이남지역에 출구를 3개로 분산시켜 구축하였다.

2땅굴을 수색하던 한국군은 수색 도중 북한이 매설한 폭발물에 의해 7명이 희생되었다.

당시 남으로 의거 월남하였던 김부성씨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여러 곳의 지하 땅굴이 제2땅굴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그는 1땅굴의 경우 북방한계선으로부터 출발하여 남방한계선 후방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땅굴을 굴착되어 있으며 입구는 DMZ 북방한계선 북한 감시초소 후방 5~6m 능선에 위치하고 출구는 DMZ 남방한계선 이남에 5개를 설치하여 평소 1~2개소만 사용하다가 결정적 시기에 나머지 3~4개소를 모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증언하였다.

(3) 제3땅굴

제3땅굴은 1978년 10월 17일 판문점 남쪽 4Km지점 군사분계선 남방 435m지점에서 발견되었다.

판문점 공동감시구역에서 군사정전위원회를 지원하는 유엔군 전진기지인 캠프 키티호크로부터 2Km 지점이며, 임진각 서북쪽에서 4Km 지점, 통일촌 민가에서 3.5Km밖에 안되는 서울에서 가장 근접한 비무장지대이다.

3땅굴은 군사분계선 서쪽 1,200m 지점에서 추정되는 북한 지역 입구로부터 분계선을 넘어 동쪽 약 435m 지점까지 파고들어온 땅굴이다.

높이 2m, 폭 2m, 지하 73m, 총길이 1,635m, 침투길이 435m로 2땅굴의 구조와 유사한 암석층 아치형 구조물로 구축하였다.

전술능력은 1시간에 3만명의 병력과 야포 등 중장비까지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3땅굴에 대해서도 “미제와 한국이 북침용 땅굴을 팠다”고 역선진공세를 취하였다.

(4) 제4땅굴

제4땅굴은 1990년 3월 3일 강원도 양구 동북쪽 26Km 지점, 군사분계선에서 1.2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하였다.

높이 1.7m, 폭 1.7m, 지하 145m, 총길이 2,052m, 침투길이 1,028m로 구축된 대규모 남침용 땅굴이다.

전술능력은 제2~3땅굴과 비슷한 전술능력을 갖추고 있다.

북한은 UN사측이 3월 5일 공동조사를 제의하였으나 이를 모략극 이라고 목살한 바 있다.

그러나 제4땅굴도 제1~3땅굴과 마찬가지로 갱도 구축 공사에서 폭약 장치용 구멍의 방향이 모두 남쪽으로 향해져 있었으며 배수로도 경사가 북으로 낮게 되어 있어 누가 보더라도 북한에서 파고 내려온 땅굴임을 입증할 수 있다.

2) 종합평가

본 사건은 북한이 한반도의 무력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시킨 중대한 사건이다.

북한은 땅굴을 이용한 기습작전을 전개하여 최단 시일 안에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전방의 각 군단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전 2개 여단 병력을 남방한계선 이남까지 깊숙이 침투시키고 24시간 안에 수원-원주-강릉계선을 장악하여 한국군 주력부대를 초토화시킬 것을 계획하고 땅굴굴착공사를 추진한 것이다.

땅굴굴착에 대해 한미가 강력하게 북한에 항의하였지만 오히려 북한은 남측이 북침을 위해 땅굴을 팠다는 역선전을 전개하여 왔다.

특히 북한이 땅굴굴착공사를 시작한지 40년이 경과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땅굴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① 북한이 굴설한 남침용 땅굴을 4개 지역에서 발견하였으나 강력한 대북 응징조치를 강구하지 못하였고 재발방지 및 대응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전방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질탐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땅굴 및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③ 화성·일산, 파주지역 등에서 주민들이 땅굴 신고를 수차 하였으나 이를 예산 및 장비 부족 등으로 소홀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예산 및 장비를 대대적으로 증편하여 민관군 합동으로 땅굴탐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1) 사건 개요

판문점도끼만행사건은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UN군 측 초소 부근에서 북한군 30여명이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진행 중에 있던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하고 9명 중경상, 차량 3대를 파손시킨 사건이다. 사건직후 미국은 테프콘 3호(경계상태 돌입)를 발령하고 8월 21일 새벽 07:00에 테프콘 2호(전쟁돌입상태)를 발령하여 미루나무 절단작업을 완료하였다.

8월 24일 미국 정부가 김일성의 메시지를 수락하고 공동경비구역안에서 UN군의 신변안전 보장 및 판문점공동경비구역을 북과 남으로 분할 경비 등 안전구역에 관한 부속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본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⁸²⁾

본 사건은 1973년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후 당과 군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자기 세력을 과시하고자 무모하게 도발한 사건으로 김정일의 군사적 지도력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 및 반미여론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8월 18일 10:30분 공동경비구역내 미루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8명의 UN사 작업반(미군 장교 2명, 한국인 장교 1명, 작업원 5명)이 경비병을

82) <http://cafe.daum.net> : <http://blog.daum.net>.

동반하여 관문점 공동경비구역 현장에 도착하여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시작하였다. 작업 착수 후 북한군 9명(장교 2명, 사병 7명)이 트럭을 이용하여 현장에 도착하였다.

북한군 장교는 UN군 장교에게 작업을 중단하라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으나, UN군 장교는 작업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몇 분이 지나서 북한군 경비병은 30여명으로 증가하였고 그 중 북한 장교 1명이 소매를 걷어 올리며 “죽여라”는 소리와 함께 보니파스 대위를 공격하였다.

북한 경비병 30여명은 도끼와 곡괭이를 휘두르며 기습하여 미군장교 2명이 살해되고 유엔군 측 장병 9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차량 3대가 파손되었다.⁸³⁾

사건 직후 주한미군사령부는 데프콘 3호(경계상태 돌입)를 발령하고 전투태세에 돌입했다.

미국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F-4 전폭기, F-111전폭기 각 1개 대대를 한국기지에 배치하고 핵항공모함 레인저호를 한국 해역으로 이동하는 한편 B-52폭격기를 급거 출동시키고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1,800여명을 한국으로 증파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였다.

포드 대통령은 사건을 보고 받고 “사악하고 일방적인 살인행위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밝혔고, 8월 19일 16:00(한국시간) 제 397차 정전위를 통해 “이 잔인하고 호전적인 행동은 묵과 할 수 없으며 북한은 잔인한 행동의 모든 결과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북측에 항의하였다.

미국은 ① 북한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시인할 것, ② 공동안전구역에서 UN군의 안전이 결코 도전받게 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할 것, ③ 박

83) 전경만, 주요위기관리 사례 분석연구, 한국국방연구원, 1995. 32면.

철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처벌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의로 조선인민군, 노동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에게 전투태세(준전시상태)에 돌입할 것을 명령하였다.

정부는 본 사건에 대해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항의하고 모든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북한의 전쟁도발기도를 사전 분쇄할 것을 촉구하였다.

8월 20일 03:00에 백악관 NSC는 “관문점의 미루나무를 절단하라”는 지시를 하달하고 21일 H시 미루나무 절단작업을 개시하도록 작전명령이 하달되었으며 한국군, UN군, 판과 하와이 상황실도 각 부대에 지시와 명령을 하달함으로써 준비가 완료되었다.⁸⁴⁾

8월 21일 한·미 양국 군부대는 완전무장을 갖추고 동이 트기 직전 작전지역으로 이동하였다. 특별임무부대는 36대의 무장 헬기에 나누어 탑승하고 주한미지상군 보병사단 모리스 브래드리 소장이 동승하였다.

한미양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휴전선 남방 2Km지점에 APC와 3백명의 한미긴급출동부대를 대기시켰고 B-52기는 북한레이다 교란용 채프(Chaff)를 떨어뜨리며 군사분계선 직남방상공에 당도했다.

미국은 8월 21일 데프콘 2호를 발령하고 미루나무 절단작업을 강행하여 07:45분 모두 종료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청와대 및 백악관 상황실로 즉각 보고되었다.⁸⁵⁾

미루나무 작업이 종료 된지 3시간 후 11:00에 북한측 정전위 수석대표 한주량 소장은 UN군측 푸르덴 제독을 만나 김일성의 친서를 전달하였다.⁸⁶⁾

84) 이영린, “한·미 위기인식과 정책결정, 한반도 냉전시 위기를 중심으로”, 국방대학원, 1999. 80면.

85) 김기중, 앞의 책, 52-54면.

친서의 내용은 “오랫동안 판문점에서는 큰 사건 없이 지내왔다. 이것은 좋은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 측에게 도발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측은 절대로 먼저 도발하지 않으며 도발이 있을 때에만 자위권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것은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측은 8월 19일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제시된 미국의 요구를 만족시키지는 못하나 국무부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사건 발생 10일 후 8월 말 준비태세를 해제함으로써 사태가 종결되었다.⁸⁷⁾

정부는 8월 21일 국회 외무·국방위에서 차후 북한의 어떠한 대·소여하를 막론하고 도발에는 보복으로 임할 것과 본 사건이 UN군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의 단복 보복에는 한계가 있고 즉각 대응하지 못하였다.⁸⁸⁾

2) 문제점

본 사건은 과거 북한에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였던 UN군 측이 즉각적인 보복조치를 강행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직접적인 위협을 주었고, 한미간 군사·외교적 협력 강화로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강구하여 사실상 북한을 굴복시켰다는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⁸⁹⁾

8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 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983면.

87) 북한은 군사분계선 남쪽에 있던 4개초소를 철거하고 북한군이 통로로 사용하였던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지금까지 통행이 차단되어 있으며, 판문점 회의장 건물 구역에 높이 5cm, 너비 50cm의 시멘트포장 경계선이 만들어 졌고 가로, 세로 10cm, 높이 1m의 시멘트 기둥이 10m간격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88) 조선일보, 1976. 2. 22.

89) 하광희, “위기관리 차원의 북한도발 분석과 교훈”, 국방정책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01. 197~198면.

당시 북한군은 “도발하지도 말고 도발에 걸려들지도 말라”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사진 촬영 및 상부에 보고에만 그쳐 커다란 추가적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미가 합동으로 미루나무를 제거하는데 급급하였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응징조치를 강구하지 못하였다는데 커다란 아쉬움을 남겼다.

마.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1) 사건 개요

강릉 잠수함침투사건은 1996년 9월 18일 북한 인민무력부 경찰국 해상처 산하 22전대 26명의 특수부대원들이 300톤급 잠수함을 이용하여 강릉지역 해안에 침투한 사건이다.⁹⁰⁾

합참은 9월 18일 위기 조치반을 편성하여 1·2군 지역에 “진돗개 하나”⁹¹⁾를 발령하여 독자적인 대침투작전을 수행하였다.

군경 예비군 합동작전으로 추진된 무장공비 소탕작전에서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사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11명의 사체를 발견하고 도주한 잔당을 추적하여 교전 끝에 13명 사살(경찰조장, 잠수함장 등), 1명 생포(이광수 상위 당시 31세)하였으며, 대전차 로켓을 비롯하여 M-16, AK 소총, 경찰지도 등 유류품 367종 4,380점을 노획하였다.

그러나 아군의 피해도 17명 희생(국군 11명, 경찰 예비군 2명, 민간인 4명) 되는 등 인명피해가 컸다.

90) http://cafe.daum.net/nts_0303 : <http://blog.naver.com/poi2520> : <http://www.nis.go.kr> : <http://www.mng.go.kr>.

91) 진돗개 하나는 적의 침투가 예상되거나 침투한 상황에 발령된다.

북한의 잠수함 침투 목적은 강릉비행장과 영동발전소를 비롯하여 동해안 지역의 군사시설물들을 정찰하고 전시에 대비한 자료 수집 및 강원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참석하는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려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특히 잠수함 침투사건은 일상적인 군사활동 차원에서 대남첩보활동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잠수함 자체에 어뢰를 장착할 수 있고 다련장 로켓포와 대전차 공격용 무기를 신고 있었다는 점, 북한군 장교들을 집단으로 침투시켰다는 점에서 명백한 대남 군사도발인 것이다.

본 사건은 1996년 9월 18일 00:55분 택시 기사가 발견하였다. 그는 강릉시 강동면 동해고속도로상에서 좌초된 것으로 보이는 선박 1척과 거동수상자 2명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함참의 작전지휘 하에 군경 예비군은 자체 사살된 것으로 판단되는 사체 11구를 발견하였고 교전 끝에 13명 사살, 1명을 생포하였다.

9월 20일 김영삼 대통령은 “이번 잠수함 사건은 단순한 간첩의 남파라기보다는 무력도발행위”로 규정하였다.

또한 북한의 “도발이 재발될 경우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선언하는 한편 20일에는 미국에 대북 강경 경고를 요청하였으며, 21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잠수함 사건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공식 제기하였다.⁹²⁾ 미국은 페리 국방장관을 통해 “우리가 가진 증거는 북한의 잠수함이 일상적인 훈련 중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⁹³⁾

한미연합사는 초기대응반 및 위기 조치반을 소집·운영하는 한편 상

92) 조선일보, 1996. 9. 21.

93) 조선일보, 1996. 9. 24.

황평가 및 조치전문을 전파했고 10월 2일 비서장급 회의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해 북한에 항의하고 중지를 촉구했다.⁹⁴⁾

그러나 북한은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이 잠수함의 엔진고장으로 남쪽으로 표류하여 “적지에 상륙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무력충돌이 불가피하게 됐을 것”이라는 모호한 발언을 하였다. 잠수함 사건으로 남북갈등이 고조되자 9월 26일 판문점에서 “피에는 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위협하고 나섰다.

9월 30일에는 비서장회의를 제의하고 10월 2일 개최된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에서 북한 측 박임수 대좌는 움즈 대령에게 “우리는 남측이 우리 인민군을 사살하고 있는 데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미국은 이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한편 10월 3일 노동신문은 “백배, 천배의 보복”을 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⁹⁵⁾

잠수함침투사건 이후 11월 1일 제18차 한미군사위원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을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무력도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양국의 강력한 공동대응을 위해 주한미군에 대한 신예 소형정찰기, 최근 군사장비 도입 등 연합방위 증진계획에 합의하였다.⁹⁶⁾

2) 종합평가

본 사건은 북한이 한국의 영해에 깊숙하게 침투하여 정탐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시킨 사건으로 정부는 군경, 예비군 합동작전으로 대간첩작전을 수행하여 무장공비들을 조기에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위기관리상 한미 양국의 견해차이로 인해 위기관리의 문제점이

94) 국방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국방부, 1997. 126-127면.

95)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종합판 62호, 내외통신사, 1997. 445-446면.

96) 조선일보, 1996.11.1.

노출되었다.

그것은 미국이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 및 군사적 위협발언에 대해 한국정부만큼의 위기인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이 북한의 대남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도 미국 국익에 우선하여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요구하는 한편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자제해 줄 것을 피력하는 등 한미간 갈등요인이 작용하였다.

특히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이 명백한 영해침투이며 정전협정 위반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사 및 연합사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북 응징조치를 강구하지 못하였다.

돈 오버도퍼는 1996년 10월 중순 중앙일보가 북한의 추가도발이 있을 경우 육해공군 차원에서 보복공격을 위해 한국군이 북한 내에 12개 공격표적을 선정해 놓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어 주한 미군사령부에 충격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미국은 한국측으로부터 미국과의 협의나 동의 없이는 북한에 대한 군사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만족스런 답변도 받아 내지 못하였다⁹⁷⁾ 밝혔다.

마. 서해교전

1) 사건 개요

제1차 서해교전은 1999년 6월 15일 북한해군 경비정 4척과 어뢰정 3척이 NLL을 침범하여 한국해군 초계함 2척과 고속정 8척이 상호 근접하여 고속 기동전과 대함전투를 전개한 해전이다.

97) 돈 오버도퍼, “두개의 코리아”, 중앙일보, 1998. 352~357면.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되었으나 아군의 강력한 화력으로 북한 서해 함대 어뢰정 1척과 경비정 1척이 침몰되었고, 다른 경비정 3척도 크게 파손되는 한편 인명피해는 최소 30명 이상 사망, 7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⁹⁸⁾ 반면에 아측은 초계함과 고속정이 경미한 손상과 9명이 가벼운 부상으로 대전과를 장식한 교전이다.

제1차 서해교전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햇볕정책이 대북정책으로 고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추진되어 왔다.

김정일은 1999년 4월 3일 적들이 햇볕정책을 대북정책으로 고착시키는 만큼 체제대결을 첨예하게 유발시킬 수 있는 남북한 협상우위의 방법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3호청사에서 DMZ안의 극지적 도발에 대한 방안을 3호 청사에서 기획하고 해군사령부 차원에서 실행에 옮긴 것이다.

통일전선부와 3호 청사에 43조를 편성하고 다양한 남북 현안문제를 종합검토 하여 “서해 5개 도서 주변해역관할권 주장”에서 문제를 착안하였다.

1999년 5월 43조는 서해 영해권 주장에 대한 제의서를 김정일에게 제출하였고 김정일은 “서해교전이야 말로 남조선의 북침도발을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전술안이며 놈들은 우리 선군정치로 단단히 구속시킬 수 있는 현 시대의 가장 주동적인 명안”이라고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초하여 43조는 단계적 전략을 수립하고 인민무력부 작전국과 협의하여 연평해전을 6.15로 계획하고 작전방법 및 동원부대를 결정하였다.⁹⁹⁾

98) 국방부, 국방백서 1999, 국방부, 1999. 198면.

99) 북한이 6.15를 작전일로 택한 것은 꽃게잡이 철에 영해권 갈등을 가장 첨예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는 대남 적대감을 자극시키려면 북한 어민들이 남한의 해군에게 납치되거나 사살당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은 1999년 6월 6일부터 6월 14일 작전일 전날까지 매일 수차에 걸쳐 NLL을 침범하였다.

6월 6일에는 어선 20척과 경비정 3척은 NLL 남방 2-3Km까지 침범하여 아측은 고속정 3척을 즉각 출동시켜 복귀할 것을 종용하였다.

2함대사령부는 비상소집을 발령하여 25전대 소속 함정 5척을 출동시켜 북한 어뢰정의 남진을 저지시켰으며, 대형 상륙함(LST)과 300톤급 예인선을 연평도 근해에 전진배치 하고 1개 전투부대 지휘부를 작전기지에 위치 시켰다.¹⁰⁰⁾

6월 7일에는 경비정 3척이 어선 15척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NLL남방 3.5Km까지 침범하여 아측은 고속정 편대가 출동하여 근접하여 시위기동을 전개하였다. 북한의 경비정 2척이 파손되었고 1척은 NLL 남방 2.5Km에서 정지하여 고속정 편대와 대치했다.

6월 8일에는 북한 경비정 4척이 어선 10여척과 NLL 남방 9Km까지 침범하여 아군 고속정 8척이 출동하여 퇴각을 요구하자 4척은 퇴각하였다.¹⁰¹⁾

합참은 6월 8일 북한 경비정이 NLL 침범과 관련하여 위기조치반을 소집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태세를 갖추었다. 국방장관은 합참의 긴급 상황을 보고받고 북한 경비정이 NLL 이북으로 밀어 올리고 절대로 북한군에 밀리지 말 것을 지시했다.¹⁰²⁾

6월 9일에는 북한 경비정 6척이 NLL을 3~7Km까지 침범하여 해군은 고속정 12척을 출동시켜 퇴각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북한 경비정은 충돌공격을 가해왔다. 양측은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함정의 경미한 손상을 입게 되었다.

100) 박정성, “연평해전 : 지휘성공사례”, 국방대학교 강의 교재, 2001, 11~12면.

101) 중앙일보, 1999. 6. 10.

102) 국방부, 국방백서, 국방부, 1999. 197면.

6월 9일 국방부는 “북한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월선과 관련한 국방부의 입장”이라는 대북 성명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6월 10일에도 경비정 7척이 남하하여 아군 고속정 10정과 대치하였다가 퇴각하였다.¹⁰³⁾

6월 10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① 북방한계선을 지상분계선과 같이 확고히 지키고, ② 이를 위해 서해 해상 해역에 해군함정을 추가 투입하며, ③ 북한의 모든 함정을 NLL 북방으로 철수시킬 것을 촉구하며, 철수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사태에 대해선 그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 등을 결정하였다.¹⁰⁴⁾

6월 11일에도 북한 경비정 9척이 NLL을 침범하여 아군은 고속정 10척을 즉각 출동하여 시위 기동으로 대처하자 북한 경비정은 충돌 공격을 감행하였다. 아군 고속정은 이에 대응하여 시위 기동에서 함미 부분충돌을 실시하였다. 결과 북한 경비정은 구잠함 1척, 대형경비정 2척과 중형 경비정 1척이 선체와 함미 구조물이 대파되어 자력으로 기동이 불가능하여 예인조치 되었으며 고속정은 4척이 함수 일부가 파손되었다.

그러나 북한경비정 9척이 NLL을 침범하여 고속정에 충돌공격을 계속 시도하였으나 아군의 회피 전술과 포위 기동으로 퇴각 하였다.¹⁰⁵⁾

정부는 6월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하였다.¹⁰⁶⁾

6월 13일에도 북한 경비정 4척이 침범하여 충돌 공격을 시작하였으나 별다른 공격을 하지 못한 채 퇴각하였고 14일에는 북한 경비정 5척이 남하하여 충돌공격을 감행하여 왔다.

103) 중앙일보, 1999. 6. 11.

104) 조선일보, 1999. 6. 11.

105) 국방일보, 1999. 6. 13.

106) 강철훈, Allison모형을 이용한 위기시 정책 결정 연구(냉전시 한반도 위기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54~56면.

43조의 계획은 인민군총참모부 작전국장 리명수 대장과 김운심 해군사령관(당시 상장)의 철저한 보안 속에 6.12일 작전계획이 비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은 해군사령관 관저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이번에 해군사령부에서 영웅이 몇 명 배출 해야겠다”고 격려했으며, 해군사령관은 “장군님의 어뢰알이 되겠다”고 충성 맹세를 다짐하였다.

김운심 해군사령관은 6월 13일 서해함대로 직접 내려가 최종적으로 전투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6월 15일 북한 경비정 4척과 어뢰발사관을 개방한 어뢰정 3척이 NLL을 침범하여 09:28분 북한 경비정 등산곶 684호에서 AK소총과 25mm 기관포로 선제공격을 가하여 왔으며, 어뢰정 3척도 추가로 가담하였다.

아군 고속정은 교전규칙에 따라 20mm 발칸포와 40mm 기관포 및 76mm 함포로 응사하였다. 교전 14분 만에 10척의 북한 함정들 중 어뢰정 1척과 경비정 1척이 침몰되고 3척의 경비정이 파손되었으며, 많은 인명 손상을 당하였다. 09:48분 대부분의 북한 함정들은 퇴각하였고 해군은 초계함과 고속정의 정미한 손상과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전투 결과 장비와 화력면에서 우세한 우리 해군의 한관승이었다. 북한 해군의 함포가 수동인데 비해 우리 해군의 함포는 자동으로 정교한 사격 통제 레이더에 의해 76mm, 40mm, 20mm포가 발사되었던 것이다.

북한의 기습공격하에서도 325호의 정장 안지영 대위는 4발의 총탄을 맞았지만 함교에서 전투를 지휘하여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10:00-11:30분 북한 경비정 9척은 긴급철수 하여 NLL 북방 2Km 지점에 위치하였고 북한의 지대함 유도탄 발사 징후가 포착되어 해군은 완충구역으로 긴급 대피하였다.

10:00에 판문점에서는 유엔사와 북한군간의 서해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장성급 회담이 개최되었다. 유엔사는 북측에게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한 양측이 북방한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으로 해군병력을 철수시킬 것을 북한 측에 제의하였다.

그렇지만 북한은 북방한계선이 북한에서 12해리 이내이기 때문에 북한 영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한국해군 함정의 즉각적인 철수를 주장하고 나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북한의 서해에서 해상 무력도발을 애초 소규모 교차사격 정도로 계획됐던 것이 생각보다 확대되어 결국 북한이 패배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은 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경비함에 장갑철벽을 설치해 줄 것 등” 경비함의 성능개선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17일 김정일은 “이번 전투는 참 잘됐다”로 치하하였고 9월에는 해군사령관을 불러 북한군 공훈합창단 경축공연을 관람하면서 그의 불안을 달래주기도 하였다.

6월 20일 김정일은 서해교전에 참여한 장병들에게 김정일의 이름이 새겨진 컬러 TV와 사탕과자류를 선물하고 사망한 함장과 정치지도원에게는 영웅칭호를 수여하고 전사자에게는 국기훈장 1급을 생존자들에게는 전사영예훈장을 수여했다.

교전 직후 국방부는 서해 5도 인근 해군부대와 제2함대사령부, 해병여단 등에 DEFCON-Ⅲ에 준하는 방어준비 태세를 발령하였고, 6월 11일 첫 충돌공격 이후 한미연합사 위기조치반은 11:02분 대북감시태세를 WATCHON(Watch Condition)-Ⅱ로 격상시켰다.¹⁰⁷⁾

14:00에 정부는 국가안정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서해

107) 배중영, “연평해전을 통해 본 국가위기관리 발전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2001. 43-44면.

북방한계선 침범과 무력도발로 인해 야기된 교전사태에 대해 북측에 엄중히 항의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교전당시 북한지역에는 금강산 지역 및 신포지역 등에 1,932명의 한국 국민들이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선을 운항하고 있는 등 자국 국민 보호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못하였다.

15:00에 김진호 합참의장과 존 킬러리(John H. Tileli JR)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연합군 위기관리 방안을 논의한 후 미군전력을 증강시키기로 합의 하였고, 6월 19일 13:00에 전투태세강화조치를 해제하고 경계태세강화체제로 전환하였다.

조성태 국방장관은 6월 24일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여 군의 완벽한 대응태세 구축을 당부하였으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기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제1차 서해교전은 휴전 이후 남북한 해군이 최초로 교전하여 한국 해군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위기관리 측면에서도 여야가 국가안보에 초당적으로 임하였고 6월 18일 국회도 “북한의 서해북방한계선 침범행위 및 무력도발에 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국방부는 6월 10일 국방부장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나 “상황 악화 시 미국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미 국방부도 해공군력을 증파하는 등 추가적인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미공조를 과시하였다.

또한 정부가 미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에 교전상황을 성의 있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주변국 및 유엔 회원국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이루어 내었다.

제2차 서해교전은 2002년 6월 29일 10시 서해북방한계선 연평도 서쪽 14마일 지점에서 북한 경비정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고속정 1척이 침

몰하여 전사 6명, 18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당시 북한은 월드컵 축제열기가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아측 고속정을 기습공격¹⁰⁸⁾하였다. 북한은 10시 30분 경비정 684호에서 85mm 함포를 조준하여 남측 고속정을 침몰시켰다.

제2차 서해교전은 북한이 제1차 서해교전의 참패를 만회하고 2002년 월드컵을 방해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치밀하게 준비한 해상교전이였다.

당시 작전지휘계통은 2함대사령관-작전사령관-합참의장-국방부장관-청와대로 지휘체계가 갖추고 보고 및 지시체계가 전문 형태의 통신망을 통해 모든 지휘라인에 동시에 전파되는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해군은 제2차 서해교전 참패 이후 후속조치로 무력시위-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돼 있던 교전수칙을 개정하여 무력시위-경고사격-격파사격의 3단계로 단순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지휘관의 재량권을 강화시켰다.

북한은 2002년 6월 29일 서해함대 산하 8전대 등산곶 기지의 684호와 육도에서 388호 경비정을 출동시켜 NLL를 침범하였다. 아측은 고속적 편대가 출동하여 기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오전 10시 30분 북한 경비정 684호가 갑자기 85mm 함포로 조준하여 남측 고속정을 명중하였고 남측 함정들은 684호를 향해 집중 공격하였다. 양측 함정에서는 수천 발의 기관포탄을 발사하여 치열한 교전이 진행되었고 25분 뒤 북한 해군은 퇴각하였다.

그러나 참수리호 1정이 침몰되고 6명의 전사자(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조천영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와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108) 조선일보, 2002. 6. 30.

북한은 200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대한 인민군대의 입장은 단호하며 우리의 총대는 무자비하다. 만약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이 감히 불질을 한다면 덤벼드는 침략자들에게 무주고혼이 될 것이며 적들의 침략적 아성은 그 어디에 있건 무사치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정일은 6.15가 우리가 진 전쟁이라면 6.29는 사실상 우리가 이긴 전쟁이라고 해군사령부를 치하하였고 제2차 서해교전 참가자들에게는 제1차 서해교전 참가자들보다 더 높은 국기훈장을 수여하였다.

2) 종합평가

전술한 바와 같이 서해교전은 김정일의 직접 지시 하에 당 관료 및 인민무력부, 해군사령부에서 치밀한 준비로 이루어진 작전이었다.

제1차 서해교전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면 제2차 서해교전은 제1차 서해교전의 참패를 만회하고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 및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김정일은 통전위의 아태평화위를 내세워 경제협력과 남북대화를 끊임 없이 추진하면서도 육지에서는 안정권을 구축하고, 바다에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북방한계선 문제를 자위권 차원에서 계속 강조하라고 반복하여 지시해 왔다.”

특히 제1차 서해교전에서는 북한이 치밀한 작전계획하에 기습공격을 감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비정 및 어뢰정을 2척이나 침몰시키고 30여명 사살, 70여명이 부상을 입는 큰 전과를 올렸지만 제2차 서해교전에서는 북한의 기습공격을 사전 예측하지 못하고 대응능력도 미비하였으며 결국 고속정 1척 침몰, 전사 6명, 부상자 18명의 큰 이명피해를

입는 참패를 당하였다.

더구나 함께 작전에 참가하였던 아측의 고속정들이 퇴각하는 북한의 경비정에 대한 강력한 타격으로 격침시키지 못하는 작전의 허점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교전수칙이 4단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속한 대응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현장 지휘관들의 재량권 및 연합작전에서도 큰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천안함 폭침사건

1) 사건 개요

천안함폭침사건은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해군 제2함대 소속 초계함 1,200톤급 천안함이 백령도 해상에서 북한의 함수함정에서 발사한 어뢰에 의해 승조원 104명 중 58명이 구조되고, 46명이 전사 또는 실종된 사건이다.

3월 30일에는 해군특수전여단 수중파괴대(UDT) 소속 한주호 준위가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하였고, 4월 2일에는 수색작업에 참여한 저인망 어선 98 금양호가 대청도 인근에서 침몰하여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되었다.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0분 서해 백령도 서남방 2.5Km 지점에 천안함은 승조원 104명을 태우고 6.3노트(시속 11.7Km)의 속도로 북서방향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거센 풍랑으로 백령도 부근에 근접하였는데 약 2분 후 천안함은 함체 바로 아래 수심 6~9m 위치에서 어뢰가 폭발하면서 그 충격으로

두 동강이 났다. 천안함 포술장은 휴대폰으로 해군 제2사령부에 천안함이 침몰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제2함대사령부가 해군작전사령부에 보고하는 데만 3분이 걸렸고, 합동참모본부까지는 23분이 지난 오후 9시 45분에야 보고되었다.

이 시각 북한의 잠수정은 어뢰를 발사하고 서해상을 빠져나간 상태였지만 제2함대사령부는 천안함으로부터 전달된 어뢰 피격으로 판단되는 보고조차도 합참 등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합참 역시 합참의장에게 오후 10시 11분, 국방부 장관에게는 오후 10시 14분에야 보고를 하였다. 군은 제2함대사령부로부터 보고 받은 시점으로부터 무려 49분 동안 군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당일 현장으로부터 49Km 떨어진 해역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초계함(속초함)이 현장에 출동해 인근 해상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해 추적 발포한 것은 사건 발생 1시간 40분이 지난 오후 11시경이었다. 이 과정에서 제2함대사령부는 속초함으로부터 “북한 신형 반잠수정으로 보인다”는 보고를 받고도 상부에 새때로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¹⁰⁹⁾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 정부는 민군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2010년 5월 20일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합동조사단은 해저로부터 이양한 선체의 변형 형태, 사고 해역에서 수거한 증거물들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 천안함은 가스터빈 좌현 하단부에서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돼 침몰한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¹¹⁰⁾

109) 한국일보. 2010. 6. 11.

110) 합동조사단은 침몰해역에서 수거된 결정적 증거물과 전체의 변형 형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사체 검안 결과, 지진파 및 공중파 분석 결과, 수중폭발의 시뮬레이션 결과, 백령도

①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돼 침몰되었고, ② 폭발 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 정도이며, ③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된 고성능폭약 250Kg 규모의 어뢰로 확인하였다.

또한 서해의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 잠수함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 전 서해 해군기지를 이탈하여 천안함 공격 2~3일 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되었다. 다른 주변국의 잠수함정은 모두 자국의 모기지 또는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¹¹¹⁾

북한은 20일 국방위 대변인 성명을 통해 검열단 파견을 제외하였고 22일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남측에 통지문을 보내 남측은 북측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무조건 받아 들여 세계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였다.¹¹²⁾

정부는 2010년 5월 20일 합동조사단의 공식 발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21일 청와대에서 소집하여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중대한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조치를 강조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의 무력 침범행 자위권을 즉각 발동할 것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사과와 관련자 즉각 처벌,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금지, 개성공단 제외 남북 교역 및 교류 중단, 천안함 사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촉구하였다.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는 교류, 국방, 외교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① 교류 분야에서 북한 선박 한국 영해 운항 금지, 남북 교역 중단, 한국인 방북 불허(개성공단-금강산 예외),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지원

근해 조류 분석 결과, 수집한 어뢰 부품들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렸다.

111) 동아일보. 2010. 5. 21.

112) 동아일보. 2010. 5. 24.

보류(영 유아 지원은 지속), ② 국방 분야에서 자위권 등 적극적 억제 원칙, PSI 해상 차단 훈련 실시, 대북 심리전 6년 만에 재개, 한미 연합 대잠수함훈련 실시, ③ 외교 분야에서 안보리에 천안함 사태 회부, 한미 동맹 차원에서 제재 협의, 국제기구에 대북 응징 촉구, 유엔결의 1874, 1718호 엄격한 이행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북심리전 재개 등 정부의 제재조치가 발표되자 북한은 인민군 전선 중부지구사령관은 남한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 버리기 위한 직접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¹¹³⁾

그러나 정부의 천안함 대북조치는 대북 심리전 재검토, 서해훈련 장소 변경, 개성 인력 탄력 운용 6자공세 대응 자제 등 줄줄이 멈춰서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 6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 군사훈련으로 한미는 동해에서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대북 무력시위 차원에서 한미해상훈련 ‘불굴의 의지’가 실시되었다.

미 해군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와 한국 수송함 독도함을 비롯하여 양국의 함정 20여척, 최신에 전투기 F-22 4대, 항공기 200여대가 작전에 참여하였다. 공군은 별도로 공중급유훈련을 실시하였고 한미 양국은 서해에서 대잠훈련을 비롯하여 연말까지 매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은 7월 24일 국방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의도적으로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는데 대응해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을 개

113) 조선중앙통신. 2010. 5. 24.

시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전군과 전민에 비상경계태세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¹¹⁴⁾

정부는 한국군 단독으로 서해 육해공 합동훈련¹¹⁵⁾을 실시하였다. 8월 5일에는 대잠자유공방전, K-9자주포 등 포사격을 실시하였고 6일에는 대잠자유공방전, 해안포 대비훈련, 적특수작전부대 침투 대비훈련, K-9 자주포 등 포사격을 실시하였다.

7일에는 합동 대공사격훈련, 야간 대잠자유공방전, 8일에는 대잠사격훈련, 적어뢰 탐지훈련, 포사격, 9일에는 잠수함 침투 대비훈련을 실시하였다.

2) 종합평가

천안함폭침사건은 북한 정권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강력한 대북정책의 추진과 한미동맹 강화 등으로 남북관계가 위기에 봉착하였고 국제적으로 고립이 가속화되고 있던 시점에서 북중동맹을 강화하여 위기를 타개해 나간다는 계산된 모험주의에 따른 대남 무력도발사건으로 판단된다.

김정일은 2010년 5월과 8월 2차에 걸친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의 정치·경제적 지원을 이끌어 내었고 한미동맹 강화에 대응한 북중관계 강화를 성공시켰다.

금번 천안함사건은 평시 해상에서 전례가 없었던 거대한 사건으로 서해교전을 통해 북한의 잠수함 공격가능성을 예상하고도 군의 대잠전력 증강에 소홀이 하여 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14) 동아일보. 2010. 7. 26.

115) 2010년 8월 5일부터 9일까지 실시된 서해 육해공 합동군사 훈련에는 해군 한국형 구축함, 1,200톤급 및 1,800톤급 잠수함, 호위함과 초계함, 고속정 등 20여척과 대잠 헬기(링스), 해상초계기(P3-C) 등이 참가하였고 육군과 해병대, 해경이 참가하였다.

더구나 1,200톤급 초계함에 104명의 승조원들이 탑승한 함정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격침되었는데도 작전지휘라인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군사적 대응조치도 강구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특히 군의 정신상태가 해이되어 있었고 작전지휘라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점, 위기 조치반의 가동, 국가안전보장회의 대책 수립, 합동조사단의 발표, 국제적 대응조치 하나 완벽한 것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미흡하였다.

① 북한의 지속적으로 대남 무력도발을 자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잠수함의 기습공격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② 사건을 전후한 시점에서 북한 잠수함의 움직임을 사전 파악하고 있었으나 이에 방심하고 경계조치의 허점을 보였다.

③ 우리 해군의 주력전투함정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해역에서 함정간 합동작전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응징조치를 강구하지 못하였다.

④ 군 지휘라인이 초계함-제2함대사령부-작전사령부-합참의장-국방부장관-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였고 국가안전보장회의 대책도 미비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⑤ 합동조사 결과에 상응한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도 내부적으로 여·야간, 보수·진보간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국제적인 공조도 이루어 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주변 4강의 이해관계로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발표 결과에 호응하지 않았다.

⑥ 한미 대응조치도 사전 계획보다 낮추어 대처하는 등 정부의 5.24 대북제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⑦ 국민이 단결하지 못하였고 분열되는 가운데 친북 단체 및 진보진영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반미, 반정부 여론을 조성하고 유언비

어를 조장하여 왔다.

⑧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 안보태세를 재정립하고 국론분열을 총력안보로 승화시켜 나가는 문제이다.

IV. 결론

1. 향후전망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지난 60여 년간 한편으로는 대화를 제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력도발을 자행하는 형태를 지속적으로 답습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와 군은 북한의 도발사태해결에 급급하여 무력도발에 상응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강구하지 못한 채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였다.

특히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대내외의 정세 및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시기별, 능동적으로 대남 무력도발을 강행하여 왔으며, 북한의 대남전략이 변화하지 않는 한 향후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2010년 9월 28일 당 대표자회의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권력세습체계를 공식화한 북한은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투쟁, 주민의 반발의식, 대외의 압력을 내적 단결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대남 무력도발을 타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¹¹⁶⁾

북한은 지난 7월 27일 조평통 대변인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선군

116) 현재 북한 군부는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를 중심으로 대남 강경파들이 중심에 포진하고 있는 가운데 박길연 외무성 부상은 8월 29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 핵 항모가 우리 바다 주변을 항해하는 한 우리의 핵 억제력은 결코 포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으로 다져진 더 크고 더 무서운 억제력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 “상용무기에 의한 전면전쟁이든, 전자전이든, 핵전쟁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다”¹¹⁷⁾고 주장하여 왔다.

또한 9월 29일에는 박길연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 핵 함모가 우리 바다 주변을 항해하는 한 우리의 핵 억지력은 결코 포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은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다.

① 제3차 핵개발 및 탄도미사일 실험을 강행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난 5월 북한이 발표한 바와 같이 핵융합반응을 이용한 핵무기의 소형화와 소형화된 핵무기를 실험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② 서해해상에서 합대간 교전이나 어선 나포, NLL 남쪽 지역으로 대규모의 포사격훈련을 예상할 수 있다.

③ G20 정상회의를 전후한 시점에서 한국에 위협적인 무장공비 침투 및 테러와 같은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경색극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 및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대남·대미정책을 유화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117) 로동신문, 2010. 8. 1.

2. 대응방안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남북한의 정치·경제·군사·사회적 구조를 화해와 협력구조로 전환시켜 나감과 동시에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둘째는 북한의 무력도발이 예상 되는 지역 및 대상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매뉴얼화 하여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강구하면서 무력도발이 자행될 경우 그에 상응한 강력한 대응타격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200여 차례의 대남 무력도발을 자행하여 왔으나, 정부와 군은 그때마다 사태를 수습해 나가는데 급급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무력도발 등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무력도발, 테러, 해상침투 등 다양한 대응책을 모델화하여 위기관리에서 나타난 혼선을 방지하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응징으로 대북 억지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기별 북한의 무력도발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예상되는 무력도발의 유형을 예측하고 대응전술의 사례와 교훈을 통해 완벽한 대비책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육해공 무력도발에 대처하여 분야별 다수의 실전경험을

통한 전문가를 육성하고 팀별 부대별 작전 및 전투능력을 향상시키고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대비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셋째는 위기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다양한 위기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기관리 기구를 국가통수기구 및 군사지휘기구 차원에서 최고정책결정기구로부터 하부구조까지 체계적으로 위기관리제도를 새롭게 정비하여 일상불관한 위기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위기관리를 군사적 수단만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위기관리 전략을 사용하여 효과적인 위기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¹¹⁸⁾

무력시위를 포함한 군사적 보복 수단, 정치, 외교, 경제 분야에서의 대북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협상 카드를 구비함으로써 위기관리시 대북우위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우리나라와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차원의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온 것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¹¹⁹⁾

넷째는 독자적인 정보체제를 구축하고 작전통제권을 보완시켜 나가야 한다.

현 시기 미국에 전략정보를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보체제의 시급한 확보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주 국방태세확립의 일환으로 전략정보수집과 조기경보역량, C4I 체제(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And Computer Intelligence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및 정보가 융합되어 지휘관이 전장을 가시화하고 원활한 통제를 위해 통합된 체계를 말함)를 구비해야 한다.¹²⁰⁾ 또한 실

118) 전경만, “한반도 위기관리론”, 한국국방연구원, 2002. 9-10면.

119) 권태영, 우리군 개혁의 참고모델, 이스라엘군, 한국 군사운영분석학회, 1998. 6. 5-11면.

120) 김현기, “주한 미군의 과거, 현재 및 미래”, 군사논단, 1997. 4. 117면.

시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U-2기의 보급 운영이 절실한 실정이다.¹²¹⁾

더구나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군경, 예비군 합동 대간첩작전을 빈틈없이 전개할 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지난시기 우리는 북한에 비해 군사력이 열세하였고 미군이 작전통제권 하에서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를 강구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시급히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대외적 군사외교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국제적, 지역적 환경에서 군사적 대외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다자간 안보 및 군사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여섯째는 안보관련 실무자의 전문성을 배양하고 안보분야의 취약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합참을 비롯한 군 관련 부서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면서 국가 정보력 및 작전 지휘체계를 강화시키고 사회적 취약요소를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21) 나기산, “위기시 정책분석”, 국방대학원, 1997. 71면.

참 고 문 헌

Ⅰ. 국내 문헌

1. 단행본

- 국군정보사령부, 북한편람, 국군정보사령부, 2000.
- 국방군사연구소, 대비정규전사 2(1961-1980), 1998.
- 국방대학교, 연합작전, 국방대학교, 2001.
-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 1973 총람편, 국방대학원, 1973.
- 국방부, 국방백서(1995-1996), 국방부, 1995.
- 국방부, 국방백서(1996-1997), 국방부, 1996.
- 국방부, 국방백서, 국방부, 1999.
- 국방부, 2008 국방백서, 대한민국 국방부, 2009.
- 국방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국방부, 1997.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 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국방정보본부, 2006년 중국 국방백서, 국방정보본부, 2007.
- 국방정보본부, 러시아 군사총람, 국방정보본부, 2008.
- 극동문제연구소, 이념교육지도전서 상, 극동문제연구소, 1987.
- 극동문제연구소, 이념교육 지도전서(하), 극동문제연구소, 1987.

- 김부성, 내가 판 땅굴, 갑자문화사, 1980.
- 김학준 외, 21세기 한민족 통합론, 인천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2000.
- 남북문제 연구소, 북한의 대남전략 해부, 남북문제연구소, 1996.
- 남정옥, 한미군사관계사(1871-200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
-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종합판 62호, 내외통신사, 1997.
- 동아연감, 동아일보사, 1968.
-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 북한연구소, 1999.
- 신상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민족통일 연구원, 1998.
- 신용하, 신일본패권주의와 한일관계, 김영사, 1993.
- 외교안보연구원, “2002년 국제정세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2.
- 전경만, 주요위기관리 사례 분석연구, 한국국방연구원, 1995.
- 조명현, 한국의 국가안보, 교학연구사, 1999.
-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8,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
- 한국국방연구원, 2004-2005 동북아 군사력, 한국국방연구원, 2005.
- 황병무, 신중국군사론, 법문사, 1995.

2. 논문

- 강원식,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 한반도통일문제를 중심으로”, 동북아 연구논총 제5집, 관동대학교 동북아평화연구소, 2000.
- 강철훈, Allison모형을 이용한 위기사 정책 결정 연구(냉전시 한반도

- 위기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강녕,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국의 대한반도정책”, 21세기 한국국방의 과제와 전망, 한국국제정치학회 국방관련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6. 9.
- 김기중, “한·미 연합방위 체제하의 위기관리 형태 고찰”, 국방대학원, 1992.
- 김계동, “한미동맹관계의 재조명”, 국제정치론집 제41집 2호, 2001.
- 김병곤, “北韓의 對南工作 戰術”, 保安實務課程, 警察搜查保安研修所, 2004.
- 김명중, 북한관련 한미간 안보정책 마찰 사례 분석, 한국국방연구원, 2001.
- 김정민, “북한노동당 35호실 무엇을 하는 곳인가”, 북한 2000년 5월호, 북한연구소. 2000.
- 김정봉, “북한 3대 후계세습 체제 구축 동향과 전망”, 자유민주연구, 2010. 8. 자유민주연구학회, 2010. 8.
- 김종화, “한국의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1994.
- 김현기, “북한 특수부대의 실체”, 국방저널 2001년 11월.
- 김현기, “주한 미군의 과거, 현재 및 미래”, 군사논단, 1997. 4.
- 권태영, 우리군 개혁의 참고모델, 이스라엘군, 한국 군사운영분석학회, 1998. 6.
- 나기산, “위기사 정책분석”, 국방대학원, 1997.
- 돈 오버도퍼, “두개의 코리아”, 중앙일보, 1998.
- 민주평화자문회의, “통일논의 리뷰”, 2005. 1, 민주평화자문회의,

2005.

- 박정성, “연평해전 : 지휘성공사례”, 국방대학교 강의 교재, 2001.
- 배종영, “연평해전을 통해 본 국가위기관리 발전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2001.
- 성영화, “신국제질서하의 한반도 통일외교전략 연구” 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 1996.
- 송경호, “북한의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공안연구 통권 43집, 공안문제연구소, 1996.
- 송중환, “공산권자료로 본 6.25전쟁의 재평가”, 자유민주연구 2010. 8, 자유민주연구학회, 2010. 8.
- 심경옥, “주변국의 군사혁신 비전과 전략, 그리고 잠재력 판단”, 전략연구 제17권,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0.
- 오수열, “90년대 중국의 군사정책과 한국의 대응” 한국동북아논총, 제2집, 한국동북아학회, 1996.
- 우중창, “6.15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정일의 무력통일 준비지시”, 월간조선 2002년 3월호, 2002.
- 유동열, “한국좌파운동 현황분석”, 자유민주연구 2010. 8, 자유민주연구학회, 2010. 8.
- 이시형,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한국동북아논총 제10집, 한국동북아학회,
- 이영린, “한·미 위기 인식과 정책결정”, 국방대학원, 1999.
- 전경만, “한반도 위기관리론”, 한국국방연구원, 2002.
- 정철기, “한반도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논쟁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학

교 국제전략대학원.

하광희, “위기관리 차원의 북한도발 분석과 교훈”, 국방정책연구, 한국
국방연구원, 2001.

황정오, 한·미 군사동맹관계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
교, 2001.

II. 외국 문헌

Paige, Glenn D. The Korean Decision(New York : The Free
Press, 1968.

Spanier, John W. The Truman-Marcthur Controversy and The
Korean War(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59.

Condoleezza Rice, "Promoting the National", Foreign Affairs
Vo1.79, No.1, January/February 2000.

Jungsuk Youn, Japanese Attitude to the Question of Korean
Unification, "East Asian Review", Vo1. IV, NO. 1(Spring
1992).

III. 기타

국방일보. 1999. 6. 13.

동아일보. 2010. 7. 23, 7. 26.

동아일보. 2010. 5. 21, 5. 24.

로동신문, 2010. 5. 29, 8. 1.

반제민전 2010. 5. 22.

조선일보, 1968. 1. 23.

조선일보, 1976. 2. 22.

조선일보. 1983. 10. 10.

조선일보, 1996. 9. 21, 9. 24, 11. 1.

조선일보, 1999. 6. 11.

조선일보, 2002. 6. 30.

조선중앙통신. 2010. 5. 24.

중앙일보, 1999. 6. 10, 6. 11.

한국일보, 2010. 6. 11, 6. 25.

<http://blog.naver.com>.

<http://cafe.daum.net>.

<http://blog.daum.net>.

<http://ret.daum.net>.

<http://cafe.daum.net>.

<http://blog.daum.net>.

<http://cafe.daum.net>.

<http://blog.naver.com>.

<http://www.nis.go.kr>.

<http://www.mng.go.kr>.

책임연구보고서 2010-23

최근 천안함 사건으로 본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 연구

2010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김 영 식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